

Weekly

공감

대한민국

No.56
2010.04.14

국제기구 이끄는 대한민국 녹색 리더십

3D·콘텐츠·미디어산업 집중육성
노숙자 찾아나선 '거리의 인문학 스승'

2016 새만금 깃발축제



당신의 가슴을 뒤흔들 세계 최대의 깃발 판타지

세계 최대 새만금 방조제 완공 기념!

기간: 4.27(화)~5.6(목) • 개막: 4.27(화) • 메인 이벤트: 5.1(토)~2(일) / 5.5(수)

장소: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일원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창립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주도하자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국제산림연구기관 연합회장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못해 수입 의존도가 높다. 특히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석유, 석탄 등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기대야 한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훌륭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국토환경을 복구한 데서 힘입은 바 크다.


우수한 인력 양성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 뒤에는 선진국의 도움이 있었다. 필자도 1970년 초 미국이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던 자금으로 선진 과학을 배우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가 오늘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것도 1950, 60년대 미국이 미네소타 플랜(Minnesota Plan)에 따라 공학, 농학, 의학 분야의 교수 역량강화를 지원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된 산야를 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기적처럼 푸른 숲으로 복원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흘린 땀과 눈물은 국가 경제발전을 도왔다. 1960년대부터 매년 식목일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나무를 심는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력으로 이뤄낸 산림녹화는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방경제와 정보기술(IT)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가 산림녹화와 환경복원을 이루며 터득한 경험과 기술이 지금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선진국에게서 받은 혜택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온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들에게 역량강화의 기회를 줘 우리나라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동안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을 실시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우리 정부는 현재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 및 녹색성장을 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국제기구는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정도뿐이다. 그것도 유엔이 주도한 기구다. 그러나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은 이미 다방면에 걸쳐 여러 개의 국제기구를 설립했다. 경제 규모나 국제 활동으로 볼 때 앞으로 중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아시아의 녹색자원과 우리나라 녹색기술·자본의 협력에 의한 상생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AFoCO를 설립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산림과 환경 분야의 역량강화를 돕는다면 우리와 더욱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교육과 연구, 녹색성장 기술을 보급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목재, 에너지, 산업원료 등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의 제23차 세계총회가 오는 8월 23~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 총회를 통해 숲 활동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를 방문, 체험하게 될 모든 국가와 녹색성장의 동반자적 관계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러한 녹색성장의 동반자적 관계가 한국 주도 국제기구들을 통해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돼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리라 기대도 가져본다. 

Weekly
2010.04.14
No.56(통권 157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그간 국제사회의 우물 안 개구리이던 한국이 압축적 경제성장을 발판 삼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와 공적원조, 민간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힘찬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사진은 오랜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단에서 봉사활동에 나선 탤런트 김효진 씨. (사진제공·월드비전)



일러스트 / 김영민

Kimhyo.com 20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4.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가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16



52

기 획 특 집

글로벌 리더 더 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기구를 통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때로는 정부 간,
때로는 비정부기구 간 조직으로 분쟁, 통상·경제 분야는
물론 보건과 환경,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 속에서 역할을
키워나가는 한국은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이름을 빛내고 있다.



- 01 **Reader & Leader**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 20 **총론** 한일강제병합 100년... 이젠 G20 의장국
- 24 우리가 앞장선 첫 국제기구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추진
- 26 **인터뷰** 정광수 산림청장
“국제기구 창설로 녹색성장 견인”
- 28 세계 금융 리더십도 ‘대~한민국’
- 30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유치
- 32 **인터뷰**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명이사 김성일 서울대 교수
“WCC 제주 유치는 선진국 집인 기회”
- 34 국제기구서 활약하는 글로벌 코리안들
- 36 국제 이슈 ‘열공’ 인터넷으로 ‘실전훈련’
- 38 “고마워요, 대한민국”
- 40 개발도상국에 ‘고기 잡는 법’ 가르친다
- 42 세계 곳곳에서 나눔 활동하는 민간자원봉사 단체들

- 04 **공감 라운지** 국무총리와 트위터
- 08 **포커스** 콘텐츠 분야 일자리 8만개 창출
- 10 **지상중계** 이채필 노동부 차관 KTV 인터뷰
“‘일자리 늘리는 성장’으로 체질 개선”
- 12 **이슈** 천안함 침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 16 **역사의 쏼** 4·19혁명 50주년 “성숙한 민주주의 꽃피우자”
- 44 **공감 인터뷰**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모두 안전띠 하면 매년 600명 살린다”
- 46 **생활 정보** 전기 먹는 가전제품 세금도 더 낸다
- 48 **교육 정보** 한국폴리텍대학 융합형 교육 인기
- 50 **정책 공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450명 선정
- 51 **IT 정보** 13개 우량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추천
- 52 **이 사람** 노숙인에게 인문학 강의하는 최준영 교수
- 54 **사람들** 네팔·인도 등 오지마을 도서관 만드는 여행가 김형욱
- 56 **화제** 김치 소들리에·막걸리 소들리에를 아십니까
- 58 **생활 공감** 초보 농부 ‘주말농장’ 선택은 이렇게
- 60 **알아두세요** 산림청 ‘맞춤형 등산학교’ 모집
- 61 **위클리 코믹스** 4대강살리기 ㉘
- 62 **명사가 읽는 책** <신화의 힘>
-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 64 **문화 공감** 국악 콘서트 <뛰다 뛰다 타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5호(4월 7일자) 기획특집 '바다 영웅들의 위국헌신'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 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한주호 준위는 왜 잠수할 수밖에 없었냐”를 읽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전우애, 위기 때 노장의 활약상을 엿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체력적 한계도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처지에서 굳이 그 상황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령이나 권위가 없었음에도 구조작전에 나선 고(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애국심과 전우애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_woodh0619

“UDT가 그였고 그가 UDT였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금 고 한주호 준위의 참군인정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5년 군 생활 중 약 20년을 교육훈련 교관으로 지내면서 부대원 절반 이상을 제자로 키워냈고,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침투습격용 사다리를 고안하는 등 천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분에게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천안함 사고를 돕기 위해 끝까지 앞장선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_강지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던 장병들이 초계함의 침몰과 함께 생사를 알 수 없는 심해에서 안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날이 지나 그들 모두의 무사귀환을 바라던 간절한 마음도 어느덧 '제발 멀쩡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빨리 인양작업이 마무리돼 실

종된 장병들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무성한 의혹에 휩싸인 초계함의 침몰 원인도 속 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_유민수

“군사용어 중에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낯선 용어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낯선 군사용어들 정확하게 알자' 기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함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탐지기, 잠수정, 기뢰, 어뢰 등 구분이 어려운 용어들을 일목요연하게 풀이해줘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유익했습니다.”_woojr2001

55호 중점기획 '청년취업, 희망이 보인다'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0년 만에 10퍼센트에 달해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취업하기 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전 정보나 예비지식을 잘 갖추다 보면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_최수연

55호 이 사람 '백인몽(百人夢) 도전... 이색 화가 박종신'을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드림페인터’라는 독특한 이름을 단 화가 박종신 씨의 기사를 읽으면서 잊고 살았던 제 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먹고사느라 바쁘지만 언젠가 박종신 씨에게 제 꿈을 그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_이해미



알립니다

● 국무총리와 트위터를 @PrimeMinisterKR

국무총리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PrimeMinisterKR)를 개설했다. 트위터는 사용자가 1백40자 이내로 제한된 메시지(사진, 동영상 포함)를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정보 교환 서비스. 국무총리실 트위터를 폴로어(Follower)로 등록하면 관련 정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트위터 자기소개에서 "국민 여러분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무총리실 공식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따끔한 질책과 칭찬, 그리고 진심한 대화를 기대하겠습니다"라며 트위터를 통해 짧지만 깊은 소통의 장(場)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4월 초 현재 국무총리실 폴로어는 1백9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 5일 트위터 오픈 이벤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사항을 발 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pmo.go.kr

2012년 12월 31일 04시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대한민국 전역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월) 오전 4시로 확정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료일 이후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 기술 지원 등 시청자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로 시청자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후속조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또한 2012년 국회의원 선거(4월) 및 대통령 선거(12월 19일) 등 정치 일정과 TV 시청률이 높은 런던 올림픽(7, 8월), 주말, 명절, 크리스마스 등의 일정을 고려해 TV를 잘 보지 않는 평일 새벽 시간대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해 KBS, MBC, SBS, 지역민방 등 전국의 모든 지상파 TV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아날로그보다 5, 6배 선명한 디지털 TV 방송만 내보내게 된다. 디지털 TV를 구입하거나, 기존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가구는 디지털 컨버터를 연결하면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와 같은 유료방송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준비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른 기술적 문제, 시청자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3개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은 올해 9월 1일, 전남 강진군은 10월 6일, 충북 단양군은 11월 3일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실시한다.

1				2	
				3	4
5	6		7		
			8		
	9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4월 2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 놀랍다, 훌륭하다, 근사하다, 멋지다, 신나다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감탄사로 많이 쓰이죠.
- 백제 말기의 장군(?~660).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을 네 차례나 격파했으나 끝내 전사하였죠.
-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
- 이 지역의 전주와 나주에서 따온 것으로, 비슷하게 경상도, 충청도가 있죠. 더 이상 힌트를 드리면 너무 쉬워져서요...
- 무언극. 제스처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기(팬○○○).

세로

- 다른 나라에 물품이나 기술, 인력 등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
- 지구 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
- 이 섬의 이름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 근처에 심청이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가 있음. 북한의 장산곶까지 약 15킬로미터. 업죽산, 남산, 섬의 모양은 ㄷ자. 곡도, 따오기, 웅진군...
- 같은 수를 두 번 곱함. 자승.
- 기둥 둘레의 원판 위에 목마를 설치하여 회전하면서 아래위로 움직이게 만든 놀이 기구. 메리고라운드 a merry-go-round.

〈Weekly 공감〉 54호(3월 31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생태 2 청명 3 치수 4 무소유 6 천진난만

세로 1 생명 2 청계천 3 치유 4 무난 5 소만두

〈Weekly 공감〉 54호 '공감퍼즐' 당첨자

문미애 · 대전 중구 태평동

윤혜선 ·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이인재 · 강원 원주시 단계동

이재경 · 인천 남동구 도림동

장효남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전리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집을 짓게 해주세요!

지난해 가을, 한 노신사가 찾아와 민원을 제기했다. 사정은 이랬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살던 기와 집을 헐어내고 건물을 지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당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진입로 토지 소유자 전원의 사용승낙 없이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그는 두 달여를 공들여 진입로 부분 4개 필지 중 3개 필지의 소유자에게서 사용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남은 토지 한 곳의 소유자에게서 허락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다시 구청에 해결 방도를 물었으나 구청에선 “해당 진입로가 ‘보차혼용도로(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논리만 반복할 뿐이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노신사의 사정을 듣고 자료 수집과 현장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문제의 진입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위한 고시 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형성된 마을회관 앞길 현황도로(지적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도로)여서 굳이 토지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한 단순히 건축행위를 위해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고시한 비법정도로와 달리 법정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보차혼용도로는 구청의 의견과는 달리 법정도로였던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분석 자료를 모아 작성한 의견결서는 ‘원칙’을 강조하던 구청의 고집을 꺾기에 충분했다. 결국 구청은 자체 회의를 거쳐 노신사가 그토록 바라던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Weekly 공감〉 독자엽서 당첨자 명단 발표

지난 3월 〈Weekly 공감〉은 독자 곁으로 더욱 다가가기 위해 독자엽서를 발행,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4월 7일까지 도착한 엽서 중 50분을 뽑아 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범모(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 김규연(부산 동래구 명륜2동) / 김도희(부산 연제구 거제3동) / 김병해(경북 김천시 교동) / 김선환(경남 창원시 남양동) / 김성민(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 김영석(전북 남원시 조산동) / 김영준(광주 광산구 신가동) / 김영진(인천 중구 북성동1가) / 김인혜(경북 경주시 황성동) / 김정득(서울 종로구 동숭동) / 김종영(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김준서(광주 서구 금호동) / 김태원(경기 군포시 신반1동) / 김행웅(제주시 용담2동) / 김현주(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백송마을) / 김효진(서울 용산구 이촌동) / 문재웅(경남 진주시 마경남동) / 박애리(서울 용산구 도원동) / 박유민(전남 나주시 남내동) / 박종현(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배인용(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 백남철(서울 구로구 개봉2동) / 선아영(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 성영미(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 손충환(서울 강북구 번동) / 안용덕(경북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 양승두(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 엄지연(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 여인동(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예병철(인천 계양구 임학동) / 유영미(전남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 윤지혜(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 이기백(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 이범기(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 이병화(서울 노원구 월계동) / 이상숙(서울 성동구 마장동) / 이양우(경기 시흥시 신천동) / 이예담(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이윤지(전남 목포시 석현동) / 이재영(서울 구로구 구로동) / 이종호(부산 북구 화명3동) / 정경녀(서울 도봉구 창4동) / 정찬건(서울 강남구 대치3동) / 조병태(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조영래(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 조준찬(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 하희재(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 한은해(경기 시흥시 도창동) / 홍초롱(서울 관악구 신림2동)

* 이름 가나다 순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1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국제기구 이끄는 대한민국 녹색 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손 안에서 愛書

사진 공모전
2010.04.12~06.3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책과 독서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회/요/강

▶ 접수 기간

2010년 4월 12일(월) ~ 6월 30일(수)

▶ 응모 자격

전 국민 누구나 가능

▶ 공모 내용

- 책 읽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
-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미지를 묘사한 작품

▶ 작품 규격

- 프린트된 컬러 또는 흑백 사진 8"×10"
- 입상자는 촬영 필름 혹은 3024×2016픽셀 이상의 디지털 원본 파일 제출

▶ 출품 수량

2008년 3월 이후 촬영 작품으로 1인 3점 이하

▶ 시상 내역

구분	인원	시상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5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장려상	22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수상작 발표

2010년 7월 30일(금)

▶ 접수처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진흥팀 '손 안 애서(愛書)' 사진 공모전 담당자 앞
(T 02 2669 0745)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인
(www.read-kpec.or.kr)

▶ 주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YOBO 교보문고



바야흐로 '3D 시대'가 열렸다. 3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3D 영화를 이용한 회사 소개를 듣고있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8만 개 창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서비스산업 일자리 집중 육성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고용창출 여지가 많은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2014년까지 콘텐츠·미디어·3D산업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 “지금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몇 년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지난 4월 8일 충남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면서 염려한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유망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고용도 창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콘텐츠, 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내수 기반 확충 및 경관수지 개선 효과와 더불어 고용창출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고용 비중이 낮은 편이다. 2007년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6.7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위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사업 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은 각각 3.1퍼센트와 6.2퍼센트로, 미국의 10~11퍼센트 선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고용을 수반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이 낮은 업종 중에서 고용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는 △콘텐츠·미디어·3D △사회 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R&D) △보건·의료 산업이다.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서비스 분야 중 첫 번째

로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 전략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산업을 육성해 2014년까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미디어·3D산업 분야의 '창조확산형 일자리' 8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콘텐츠산업은 민관이 6조5천억원을 투자해 3만명, 미디어산업은 4조7천억원을 투자해 1만명, 3D산업은 15조원의 매출을 통해 4만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콘텐츠산업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은 현재 세계 8위 수준인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콘텐츠업체가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부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대기업, 해외 투자자가 함께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대형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을 아시아 컴퓨터그래픽(CG)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최근 연간 국내 CG시장 규모는 약 1천3백억원. 이 규모를 오는 2014년까지 6천3백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연간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할리우드 CG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작비 지원, R&D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우수 콘텐츠 제작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적극 키우기로 했다. 작은 아이디어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비약하는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게 콘텐츠 1인 창조기업에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미디어산업 |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제2 인터넷 붐 조성

'미디어 환경을 개선해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미디어산업 발전전략'의 골자다. 스마트폰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 대처해 기회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무선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결제, 인터넷 본인확인제, 게임 자율등급분류제, 요금제 등을 개선해 대안을 마련한다. 미디어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선랜 이용 가능 지역을 연말까지 2배로 늘리고,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을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 간 수익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등 관련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게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경우에도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공급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3D산업 | 지상파 3D 실험방송 등 초기시장 진출 주력

영화 <아바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3D(3차원 입체영상)는 3D 기술을 활용해 TV, 소프트웨어 등 3D 제품, 영화, 의료 등 3D 응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정부는 국내 정보기술(IT) 및 콘텐츠 기업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3D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3D산업 발전전략으로는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및 세계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올 10월에 예정된 지상파 3D 실험방송 등 초기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3D 공간 확보, 3D 문화재 복원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3D 기술 응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간 6천명에 달하는 3D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망 3D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D 전문펀드를 조성하며, 해당 기업 R&D 투자비의 20퍼센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 약 15조원의 3D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을 만들고, 4만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클** 최은숙 기자

국가고용전략회의 “실업률 3%·취업자 25만명 증가 목표”

올해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이러한 고용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달 1회 이상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올 1월에 '2010 고용 회복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연 데 이어 매달 1회 유연근무제, 청년실업 해소 등을 주제로 개최됐고, 4월 8일에 유망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는 4차 회의가 열렸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 고용 관련 모든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고용 이슈를 다루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세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취업자를 25만명 늘려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퍼센트 초반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4월 8일 충남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렸다.

“‘일자리 늘리는 성장’으로 체질 개선”

이채필 노동부차관 KTV 인터뷰

지난 3월 말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채필 노동부 차관은 4월 6일 KTV의 <정보와이드 모닝>에 출연해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 등에 대해 밝혔다.

●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만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동안의 노동정책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야 할 때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채필 노동부 차관은 “노동정책의 무게 중심을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취업 지원과 능력 개발 등 고용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감독 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위주의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고용을 중시해서 ‘고용’이라는 이름을 쓰는 부처를 가진 나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로 개편되면 그 명칭에 걸맞게 업무와 기능도 새롭게 정비된다.

첫째, 노동부의 ‘고객’이 바뀐다. 그동안 노동부의 주 고객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나 기간제 근로자, 영세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가 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제도를 통한 접근방법’에 의존한 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시장을 통한 접근방법’을 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만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노동부는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노동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과 최우선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는 회복세라고 하는데, 고용도 나아졌습니까.

고용은 실물경기보다 6개월 정도 더딥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취업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5천명이 늘었습니다. 공공 분야를 제외한 민간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어요. 특히 고용과 연관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늘었습니다. 회복돼가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실업자도 늘었는데, 지난 2월이 대학 졸업 시즌이었고,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지요.

조영철 기자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직업능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역임.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절실하다.
이재필 노동부 차관은 노동정책의
무게 중심을 취업 자원과 능력 개발
등 고용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른쪽 사진은 건국대 4학년
취업준비생들의 실전 모의면접 장면.



홍인영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철학은 성장 지상주의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성장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고용 동반 성장’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고, 동시에 정부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고용 중개시장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경제·사회 구조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제조업, 수출기업, 대기업 위주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내수산업, 즉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위주로 대폭 강화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공부가 사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은데,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이 되게끔 대학도 함께 노력해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간에 합리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몫을 나누는 분배형 노사관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몫을 키우는 노사관계로 전환되게끔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고용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구조적 방안들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25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늘 되풀이된다’거나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감소되도록 교육, 재정,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

선되려면 능력 개발이 중요하므로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 전달 체계를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도 올릴 수 있게 사회, 노동, 교육, 복지 제도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다.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3퍼센트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그 많은 대학졸업생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학력에 따라 눈높이는 올라간 반면에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보수나 업무환경에서 열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의 매칭을 위해 잡영 사이트(jobyoung.work.go.kr)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또 취업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직(創職)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고용지원센터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얼마 전 노동부에서 시간제 직업 상담원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28 대 1이었어요. 이처럼 여성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가 적합한 선도 모델이 되게끔 각 부처에서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보육과 일자리를 병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아 중소기업 연계형 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훈련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분석과 관련, 다국적 조사팀이 결성된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4월 8일 천안함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건 조사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 해난사고 조사 전문가들을 지원받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역 장성 단장 체제로 운영되던 민군 합동조사단이 실종자가족 대표 4명 등을 포함한 민군 공동조사단장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사고 해역에 함미 부분 인양을 맡게 될 2천2백 톤급 크레인(왼쪽)이 도착, 소형 크레인이 장착된 광양함 옆에서 선체 인양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안함 인양을 위해 사고 해역에 도착한 크레인에서 민간 잠수사와 인양 전문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천안함



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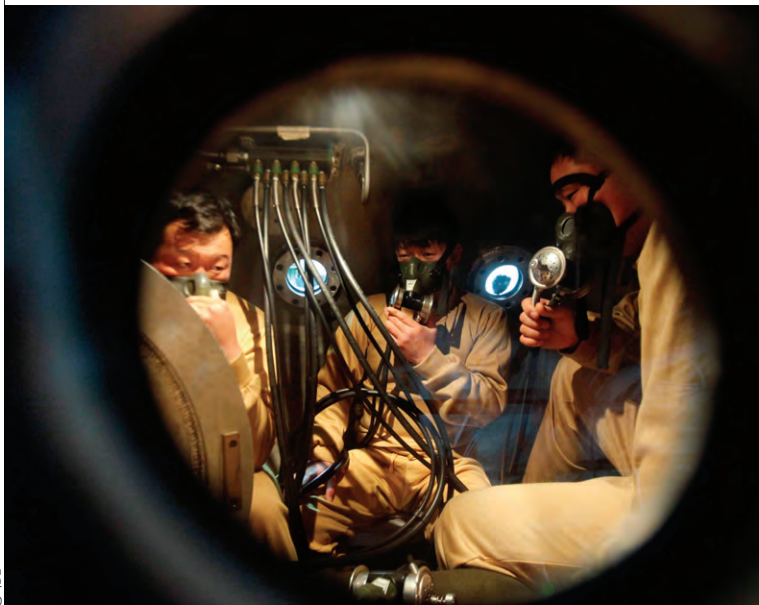
해군 함정들과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대원,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실종자와 부유물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4월 7일 오후 천안함 함미에서 김태석(38) 상사의 시신이 발견돼 옮겨지고 있다. 앞서 4월 3일에도 천안함 함미에서 실종자 남기훈(36) 상사의 시신이 발견됐다.



기상 악화로 수색을 중단했던 해병대원들이 날씨가 좋아지자 수색작업을 재개하기 전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동아DB

천안함 인양 및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광양항에서 수중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해군 해난구조대(SSU) 잠수사들이 재압챔버(기압조절실)에 들어가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동아DB

사고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자 해군 단정이 수색을 중단한 채 평택항 위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연합



동아DB

4월 8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정비지구 식당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 39명과 실종자 가족 59명이 만난 가운데 한 실종자 어머니가 생존 장병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해군 SSU와 중앙119구조대를 비롯한 잠수 수색팀이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진



동아DB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자

4·19혁명 50주년... 기념관 등 새 단장

올해 4월 19일은 4·19혁명 50주년 기념일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 등 비민주적 행태를 거듭하며 영구 집권을 꾀하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맞서 온 국민이 들고일어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됐다.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4·19혁명 당시 한성여중 2학년생이던 진영숙은 급하게 이 글을 남기고 학우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군경의 총탄에 쓰러졌다. 어린 여학생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항쟁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4·19혁명은 단순히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사건이 아니라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독재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6·25전쟁 후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정경유착과 부정 부패가 만연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했다. 게다가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고,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4할 사전투표, 3인조·5인조투표, 유권자 명부조작, 완장부대 동원,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에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

어졌고,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4월 11일, 마산 시위 중에 행방불명됐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발견됐다. 검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시민들은 병원으로 들어가 눈에서 뒤통리까지 최루탄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온 국민이 분노한 이 사건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좌시위를 벌이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정치강파의 습격을 받아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독재타도 시위로 바뀌게 된다.

마침내 4월 19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했다. 시위대의 구호는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 “1인 독재 물러가라” “이 대통령은 하야하라” 등 독재 규탄과 민주주의,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민주주의 수호’ 위해 전 국민이 일어난 날...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서울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을 진주시켰다. 군과 경찰은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며 무력진압에 나섰다. 이날 하루만 사망자 1백여 명에 부상자 4백50여 명이 발생했다.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 교수 3백여 명은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교수단의 시위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일어난 4·19혁명. 대학생은 물론 중고교생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국립 4·19민주묘지에 4·19혁명 기념관이 새로 문을 열었다.

자유당 정권 퇴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고 3·15부정선거는 다시 한다. 또한 이기붕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한다”고 밝히고 얼마 후 비밀리에 하와이로 떠났다. 권력의 2인자로 군림하던 이기붕은 가족과 함께 자살했다. 이로써 4·19혁명은 독재정권 퇴진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백86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4·19혁명의 직접적인 동기는 부정선거였으나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운동이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에 의거한 민주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 일어섰기 때문이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에 항거한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혁명이었다. 4·19혁명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확산됐고 4·19혁명은 지금도 사회운동에 정신적 활력을 제공하는 구심점이다.

11일부터 대구 2·28 기념탑~서울 4·19 묘지 순례

4·19민주혁명회 박윤석 회장은 “4·19혁명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자라 오늘날 민주주의를 피워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 4·19혁명이 어느덧 50주년을 맞았다. 4월 19일 10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관련 단체 회원, 3부요인 등 각계 대표와 시민, 학생 등이 참가하는 중앙기념식이 열린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도 4·19혁명 기념식과 희생자 영령 추모제가 있다.

국립 4·19민주묘지는 4·19혁명 50주년에 맞춰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4·19혁명의 배경, 과정, 역사적 의의 등을 생생

하게 알 수 있도록 유물, 동영상 증인, 관련 책자 등을 다양하게 갖췄다. 국립 4·19민주묘지 고취주 소장은 “4·19혁명 기념관이 최상의 추모 공간, 최대의 기억 공간, 최고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우리나라가 더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성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19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에서 출발해 부산, 마산, 구미, 광주, 전주, 대전, 문경, 충주 청주, 수원, 이천 등을 거쳐 서울 4·19민주묘지에 도착하는 4·19혁명 표식 설치 및 혁명장소 순례 행사를 연다. G

글·이혜련 기자

4·19혁명 기념일 행사

행사명	주관	일시	장소
4·19혁명 기념식	국가보훈처	4.19	국립4·19민주묘지
	부산광역시	4.19	중앙공원 4·19위령탑
	광주광역시	4.19	광주시민회관
	대구광역시	4.19	대구시청 강당
	경상남도	4.19	경남도청 대회의실
	전라남도	4.19	4·19혁명기념탑
	남원시	4.19	김주열묘역광장
	푸른사월회	4.19	익산역광장
4·19위령제 및 문화한마당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4.17~4.30	부산민주공원
	강북문화원	4.19	국립4·19민주묘지
4·19혁명 희생영령 추모 소귀골음악회		15:00	
4·19혁명 희생자영령 추모제	4·19혁명유족회	4.18	4·19혁명영령추모비
	광주·전라지부	18:00	
4·19혁명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4·19혁명기념사업회	4.14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10:00	
4·19혁명 표식 설치 및 발발지 순례	4·19혁명기념사업회	4.11~4.18	대구 2·28민주의거 기념탑~ 서울 4·19 민주묘지

세금계산서의 새로운 길 e-세로가 열립니다!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보내는 비용까지 확 줄어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세로 홈페이지 www.esero.go.kr를 참고하세요

빠르고 편리한 e세금계산서 

-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 보너스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개인영세사업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에 문의하세요
-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화**(30만원 이상)가
201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www.taxsave.go.kr 참고

함께 만들어요!
 **세미래**
대한민국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청의 공정세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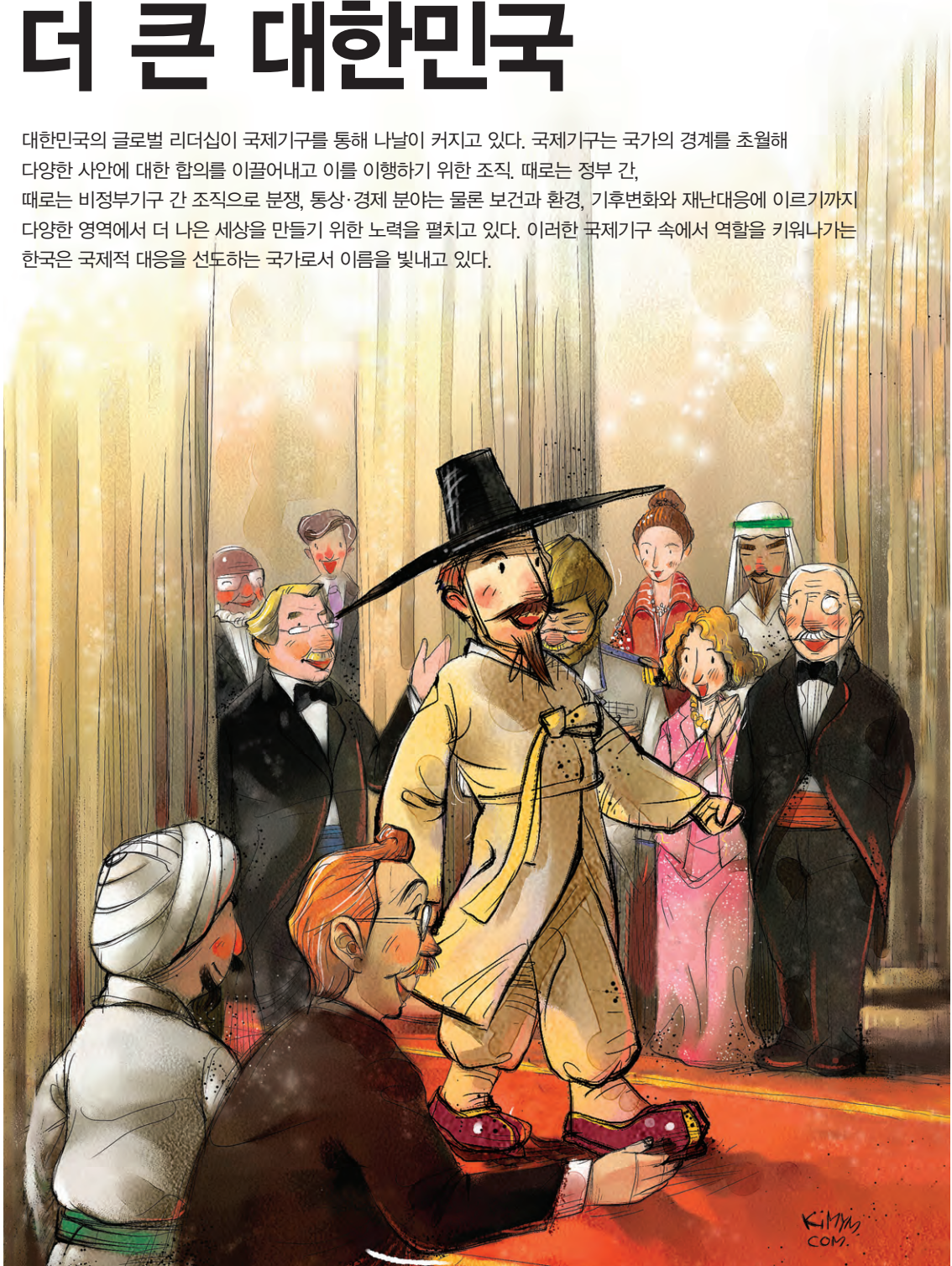
세미래 콜센터

모든 국세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기획특집

글로벌 리더 더 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기구를 통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때로는 정부 간, 때로는 비정부기구 간 조직으로 분쟁, 통상·경제 분야는 물론 보건과 환경,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속에서 역할을 키워나가는 한국은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이름을 빛내고 있다.



일러스트 · 김영민



한일강제병합 100년... 이젠 G20 의장국 '우뚛'

국제기구 유치로 위상 높이고 경제적 효과도 거둬

1백 년 전 개화기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우물 안 개구리였던 한국이다. 그러던 한국이 이제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국제기구에서도 이름을 빛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 아직 갈 길은 멀다.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국제기구 활동 및 유치, 더 나아가 창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할 때다.

● 1907년 6월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의 비넨호프 왕궁. 고평스런 기사홀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47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세계평화와 군비축소 문제를 논하고 있던,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만국평화회의의 뒤로 고종 황제 특사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종이 파견한 이상설, 이준, 이위종 3인 특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을 만방에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했던 이준 열사는 원통함을 못 이겨 호텔에서 자결했다.

그로부터 약 1백년 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2010년 3월 17일자에 실린 '한국,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 찾기(South Korea: Into position)'란 기사에서 이준 열사의 사

건을 지금의 한국과 비교해 재조명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준 열사의 일은 당시 국제문제에서 한국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준 열사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백 년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이 달라진 지금의 한국 모습을 전했다.

이준 열사가 오늘날 한국을 지켜보면 풍성한 콧수염 끝을 울리며 빙긋 미소 지었으리라. 올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다양한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 호랑이'로 불리고 있다.

최근 한국이 유치하고 창설하는 국제기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사진)를 비롯한 많은 국제회의와 국제기구를 무대로 한국은 신흥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DB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진출한 국제기구란 1951년 6·25전쟁 전사자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기념공원(UNMCK)이 유일했다. 1997년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한국을 본부로 창설되기까지, 50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는 국제기구는 없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제기구 유치에 증가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무려 7개의 국제기구가 한국에 등지를 틀었다. 한국이 유치한 국제기구(비정부기구 6개 포함) 27개 중 4분의 1이 지난해 유치된 것이다.

그뿐 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들이 각종 국제기구에 진출해 ‘코리아’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은 10년 전인 1999년 1백93명, 2006년 2백45명에서 2009년 3백26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동안 52명 증가하던 것이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위상 승격으로 최근 3년 새 단숨에 81명이 늘어난 것이다. ‘숫자로 보이는 국가 위상 상승’이 아닐 수 없다.

2000년 기점 총 7개 국제기구·협력기관 유치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제기구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7년 9월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전체 11개)로 채택해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처음 인정한 국제기구가 됐다. WIPO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을 제·개정하고 국제출원 및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1967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국은 1백84개국. 우리나라는 1979년 3월 가입했다. 한국어가 WIPO의 공식언어가 된 것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다는 의미다.

“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제기구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로 채택해 공식 언어로
처음 인정한 국제기구가 됐다. 한국어가 WIPO의
공식언어가 된 것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다는 의미다.

”

국제기구는 크게 설립 주체와 근거, 재원 등에 따라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산하기구, △국제기구 협력기관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가 유치한 첫 국제기구는 국제백신연구소(IVI)이며, 우리 주도로 설립을 추진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출범하면 한국이 유치한 두 번째 국제기구가 된다.

국제기구 유치는 단순히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다. 각종 국제회의와 워크숍, 컨벤션 등의 개최로 호텔, 컨벤션센터, 통·번역 서비스, 관광, 요식업 등이 활기를 맞게 만드는 고도의 서비스 산업이기도 하다.

국제기구 유치 확대를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가 상주 근무인원 2만명의 국제기구를 집중 조성했을 때 효과를 따져 보니 △소비지출 증가 약 6조원(국내 민간 소비지출의 1퍼센트, 서울 소비지출의 4퍼센트) △생산 유발 효과 약 10조원(국내총생산의 약 1퍼센트) △고용 유발 효과 주재원 1인당 1명 등 커다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백신연구소(IVI) 변태경 공보관은 “IVI가 우리나라에

본부를 둬으로써 한국의 연구인력 양성, 고용 창출, 백신과 학·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난 10년간 1억3천만 달러(약 1천5백억원)의 외화 유치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저개발국가의 빈곤과 질병 퇴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백신 관련 국제기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송준상 과장은 “국제기구 유치는 그 자체가 국제적 영향력의 수단이자 국력의 상징”이라며 “특히 인권, 환경, 빈곤, 난민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량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한국어 공식언어로 채택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전 세계의 국제기구가 2만3천 개(2006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유치한 국제기구 27개란 아직 미미한 수치. 국제기구가 가장 많은 미국에는 3천6백46개의 국제기구가 있다. 아시아 지역만 해도 일본이 2백70개, 태국이 1백33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우리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이 미흡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들의 경우만 해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비교우위’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2007년 2월부터 EDB 내부조직으로 국제기구 유치사무소를 설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태국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앞선 유치 사례들을 연구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획기적인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국제기구 근무자에 대한 고급 거주여건 제공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무인력 양성과 채용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준 열사 관련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좀 더 자신감 있는 나라가 되려는 노력에서 성공할 경우 올해는 한국이 1세기 전 망령을 떨쳐버리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럴 것이다. 이제 한국은 1백 년 전 울분을 떨치고 드넓은 국제무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연합



국제기구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기구 유치 등은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다.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에 이어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국내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9월 24일 제6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각국 의회 비준 받아야 '국제기구' 산하기구는 정부 조직... 협력기관은 MOU로 설립

현황

국제기구는 1831년 라인강 유역 국가들이 라인강을 자유롭게 항해하기 위해 창설한 라인항해중앙위원회(CCNR)에서 유래하지만, 1945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유엔)이 출범한 후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창기에는 주로 국제행정연합의 형태를 띠었으며 이후 경제 원조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설립됐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식량위기, 생태계 보존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하다.

특성과 요건

정부가 구성단위이므로 '정부 간 기구(IGO · Inter-Government Organiz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점에서 국제적 민간단체인 '비정부 기구(NGO · Non-Government Organization)'와 다르다. 또한 조직의 요건으로 △다자 간 국제기구 설립 결의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 예산에 대한 장기전략(회원국 분담금 등) 마련 △회원국 중심의 관리구조 등을 갖춰야 한다.

종류

국제기구는 설립 주체와 근거, 재원 충당 방식 등에 따라 크게 국제기구, 국제기구 산하기구, 국제기구 협력기관으로 나뉜다. 국제기구는 국가들 간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설립하며, 산하기구는 국제기구의 하부조직으로 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로 설립한다. 협력기관은 사무국과 협의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한다. 또 유엔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제네바군축회의 등), 유엔 전문기구(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독립기구(국제원자력기구 등), 정부 간 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등)로 나뉘기도 한다.

고려 사항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유치 대상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범정부적 협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관심국들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 요건. 장기적 재정부담 전략도 세워야 한다. 유치국이 소요 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므로 그 비용이 헌법 규정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경우 국회 동의를 필요한다. **G** 정리 · 최은숙 기자

한국의 국제기구 유치 현황

구분	기구명	주요 활동 내용	소재지	설립연도
국제기구	국제백신연구소(IVI)	개도국을 위한 백신 개발 및 도입, 서울대 내 부지와 건물 제공	서울	1997
산하기구 및 협력기관 (중앙정부 유치)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소수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자간 교육 무상원조	서울	2000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거버넌스 및 공공정책 개선		2006
	한·아세안센터	한국과 아세안(ASEAN)의 교류협력 확대 목적		200
	아태 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APCIT)	UNESCAP 산하기구로 IT 교육훈련	인천	2006
	유엔기념공원(UNMCK)	6·25전쟁 전사자 매장공원 관리 위해 설치	부산	1951
산하기구 및 협력기관 (지방자치체 유치)	유엔 산하 방재연구소(ETIURR)	도시방재 연구훈련 기능	인천	2009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SDR) 동북아시아사무소	동북아 재해경감 국제협력		2009
	유엔 기탁도서관	유엔본부 도서관 산하 기탁도서관		2009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 사무국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2009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연안 및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	부산	2004
	APEC e러닝 연수센터	회원국 간 지식정보 격차 축소 및 교육 확대		2006
	국제이주기구(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국제이주 관련 연구·교육 정책 개발	경기	2009
	국제만화가대회(ICAC) 사무국	세계 만화인들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2005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세계 과학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대전	1998
	UNESCO · WTA 산하 과학도시연구센터	과학도시 간 연구 및 교류		2006
	국제통계발전센터(ISDC)	아시아 등 역내 주요 통계수치 작성 공표		2006
	유엔대학교 환경연구소	도쿄 유엔대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통해 유치	광주	2003
	유엔국제주거위원회(HABITAT) 국제훈련센터	도시화 및 환경보존, 생태보존기술, 정주환경 개선 등 전문훈련	강원	2007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도국에 대한 해양환경 보전 관련 기술 이전과 직원훈련	경남	2003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PRC-EA)	동아시아 지역 습지정보 네트워크 구축		2009
NGO	아태변호사협회(APLA), 국제교회성장회의(CGI), 국제유도연맹(UF), 세계태권도연맹(WTF), 아시아조정연맹(ARF), 아시아태권도연맹(ATU)			

우리가 앞장선 첫 국제기구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추진

〈AFoCO〉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벗어나고 빈곤에서 탈출한 우리나라가 이제 어엿한 국제기구 유치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창설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상승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엿볼 수 있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말까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치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모두 27개다. 주로 2000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이들 국제기구들은 △중앙정부 유치 기구 6개 △지자체 유치 기구 15개 △비정부기구(NGO) 6개 등이다.

이들 국제기구에 대해 사무 공간, 시설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국제기구가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이란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기구 유치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의 저가 제공, 운영비 지원, 법인세 등 각종 세금면제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인센티브 △직접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면세혜택 부여와 특별비자 발급 등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비서, 인턴 등 한시적 인력 지원 등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 근무자와 가족들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 등을 조성하고 국제기구 단지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 국

제기구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10개의 국제기구에 대해 한국 유치를 검토하거나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진전된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다.

AFoCO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해 6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구성이 합의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AFoCO 설립을 위한 제1차 작업그룹회의가 개최됐으며(2009년 8월 24~26일·인도네시아), 여기에서 우리 측이 마련한 AFoCO 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AFoCO 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이어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09년 10월 24일·태국) 의장성명으로 AFoCO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 주도 ‘AFoCO’ 창설 가시화

산림청과 및 외교통상부는 한·아세안 산림당국이 합의한 AFoCO 설립 협정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 측의 AFoCO 설립 협정 최종문안을 마련(2009년 12월)해 이를 아세안 10개국 외교부에 송부했다. 산림청과 외교통상부는 현재 아세안 10개국 산림부서 및 외교부와 협상을 통해 AFoCO 설립 협정 최종문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영주 전문위원은 “오는 5월 중 한·아세안 외교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해 문안에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분담금, 기구 명칭 등에 대한 각국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 외교차관보급 회의에서 최종문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가서명과 비준까지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AFoCO가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가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특화되고 통합된 물 관리 협력방안 추진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물 관련 국제기구 신설 및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2009년 9월 서울서 열린 국제정보보호 컨퍼런스(ISEC)에서 국제적인 사이버 안전기구 신설을 제안한 행정안전부는 내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와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최근 저개발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김민서

우리나라 민간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 사막에서 현지 학생, 주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민간활동에 이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년 초 유엔 산하에 사이버안전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위원회가 한국에 본부를 만들고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형태로 추진 중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녹색성장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센터',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국제기구' 등 국제기구 건립이 우리의 주도로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도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동북아 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등 2012년까지 3개의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국제백신연구소(IVI)는 기존 콜레라 백신 가격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경구용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IVI가 새로운 경구용 콜레라 백신 '산콜(Shanchol TM)'을 개발함으로써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난민촌, 재난지역 등 콜레라 창궐이 우려되는 곳에서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IVI는 개도국에 만연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유일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태동한 IVI는 아시아 여러 국가가 경합을 벌인 결과 1994년 우리나라가 유치

국가로 선정됐으며, 1997년 10월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서울대 안 연구단지에서 비영리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2010년 1월 현재 IVI에는 40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회원국(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와 사무총장, 직원으로 구성된 IVI 서울본부에는 현재 20여 개국 출신 1백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고도의 서비스업”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2006년 6월 16일 인천 송도에 문을 연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UN-APCICT)는 한국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 사무국 산하기구다. APCICT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로 62개 회원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인적 자원 개발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탄생한 ICT 전문 교육훈련기관이다.

APCICT는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ICT 분야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40여 개국 1천6백여 명에게 ICT 관련 교육 훈련을 시켰다. 특히 21개 개발도상국 관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교육프로그램(Academy of ICT Essentials for Government Leaders)은 필리핀 정부의 고위 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으로도 채택돼 있으며 몽골,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등도 이를 자국어로 번역해 ICT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정광수 산림청장

“목재 펠릿용 산림 조성... 국제기구 창설로 녹색성장 견인”

숲은 미래다. 한국은 황폐한 숲을 생명의 숲으로 가꾸어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국경 너머로까지 녹색 생명을 전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과 각종 산림 관련 국제회의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은 그런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키워내는 요람이다.



임업연구원장/산림청 임업정책국장,
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장/산림청 차장 역임

● 기후변화의 영향은 한반도의 식물분포 지도를 바꾸고 있다. 강원도 영월에서 사과가 열리고 평양 대동강변에서도 대나무가 자란다.

“우리나라에 난대지역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식목일에는 나무 심는 기간을 예년보다 늘렸습니다. 2월 하순 남부지방부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4월 말까지 나무심기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제65회를 맞는 식목일을 즈음해 만난 정광수(56) 산림청장은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2만1천 헥타르에 3천6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숲 박사’다.

“1960~1970년대의 나무심기가 황폐해진 산림을 푸르게 가꾸기 위한 것이었다면, 2000년대 나무심기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목재 펠릿(Wood Pellet) 원료 공급용 바이오 순환림 조성이 목적입니다. 특히 백합나무와 같이 탄소흡수 능력이 좋고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심어 2020년까지 10만 헥타르의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에서 나온 잡목 등을 잘게 부숴 작은 원통 모양으로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목재 펠릿 1톤을 때면 이산화탄소 1.37톤의 감축효과가 있다.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에서 산림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국제회의가 열린다는데.

오는 8월 서울에서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총회가 개최된다. IUFRO는 1892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현재 1백10개국 7백여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산림 분야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IUFRO 총회 서울 개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답게 산림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에는 유엔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중 하나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0월 10~21일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것인데, 아시아는 사막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도 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을 추진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란 어떤 기구인가.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10월 태국에서 열린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AFoCO 설립을 제안했다. 아세안 정상들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 국제기구는 국가 간 협정을 근거로 설립되며, 기후변화와 사막화 등 아시아 지역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사업도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서 부족한 목재자원을 확보하고,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해외 조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재자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백만 헥타르, 중기계획으로는 2008~2017년 10년간 25만 헥타르의 숲을 조성해 해외 산림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의 해외 조림 실적은 9개국 2만7천7백96헥타르로, 목표(2만 헥타르) 대비 1백39퍼센트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는 동남아 중심의 조림사업을 우루과이 등 중남미로 확대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이 우리의 정책 중심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나.

산림청은 얼마 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이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따라 각종 산림정책으로 정부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산림은 목재 펄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녹색 일자리’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지난해 6만4천명에게 상시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도 하루 평균 고용인원 5만명에게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도시녹지, 산림휴양, 산림생태계 보전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국토의 건강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산림녹화의 경험을 해외에 전수해주며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구현함으로써 국제 높이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부터 5년간 10억원을 들여 독도 산림 복원에 들어가기



잡목 등을 잘게 부쇄 원통 모양으로 압축한 친환경 연료 목재 펄릿.

“
오는 8월 서울에서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총회가 개최된다. IUFRO는 1892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현재 1백10개국 7백여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산림 분야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IUFRO 총회 서울 개최는 산림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

로 했다. 독도의 산림생태계 복원은 독도 자생종으로서 복원 가치가 있는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섬괴불나무 등이 대상 수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올해 안에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해풍 등에 훼손된 독도의 산림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이 초종고 교과서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외교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영유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산림 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여가시간이 늘고 ‘참살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산림 휴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고 숲길,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등산로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다.

또한 숲의 치유기능에 대한 효능이 밝혀지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숲’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경기 양평군의 산음자연휴양림에 치유의 숲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전남 장성군의 편백숲과 강원 횡성군 숲치유에 치유의 숲을 개장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지난해 10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63차 IMF·WB 연차총회에서 개도국의 관심 의제를 대변하는 기초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 금융 리더십도 ‘대~한민국’

“국제금융기구 지분율 높이겠다” 주요 회의 한국서 잇따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는 1백13곳이다. 경제협력, 아동, 여성, 환경, 인권 분야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은 곧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등생으로 주목받은 한국은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세계금융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IMF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고, 세계은행 역시 이번 지분개혁에서 개도국의 변화된 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3차 IMF·WB 연차총회의 기초연설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내용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1백85개 회원국을 거느린 최대 국제금융기구다.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투표권은 철저히 출자지분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IMF 내 한국의 지분율은 1.35퍼센트(19위), 세계은행 내 한국의 지분율은 1.01퍼센트(22위)로 2008년 세계 GDP 대비 한국의 경제 비중(1.95퍼센트)이나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평균(1.48퍼센트)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을 경제 규모 수준으로 높일 방

침이다.

이처럼 지분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배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윤 장관의 발언은 신흥 개도국들의 관심 의제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113개 다양한 국제기구서 맹활약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세계은행 투표권의 3퍼센트 이상을 신흥 개도국에 이전하고 IMF 역시 5퍼센트 이상을 이전하는 개선안에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이 의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쉬운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일반자본 증액’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면서 발언권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다. 일반자본 증액은 지분 조정과 별개로 국제금융기구의 용자재원 확보를 위해 총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지역 및 역외 국가 등 67개 회원국이 참여한 총회에서 국제개발은행 중 가장 먼저 2백 퍼센트의 일반자본 증액안을 결의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회원국 지원을 강화하려는 게 1차 목적이다.

당시 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이 증액안을 지지하며, ADB가 지역 내 금융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간 금융 안전망(RFA·Reg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을 확대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과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新아시아 외교 등 국제기구 간 협력도 강화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우리나라 위상 강화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곧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직결된다는 취지에서도.

특히 올해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IMF 아시아 콘퍼런스,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 등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회의가 개최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1백3곳. 이 중 유엔 및 유엔과 관련된 기구가 38곳이고, 정부 간 기구가 75곳이다. 한국은 1949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만국우편연합(UPU)에 최초로 가입한 이래 빈곤퇴치, 아동, 여성, 환경보호, 에너지, 인권, 노동, 인구 분야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해 활동 폭을 넓혔다.

2008년 정부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개발계획·유엔연구기금(UNDP·UNFPA) 집행위원회, 국제해사기구(IMO) 집행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의사결정 기관의 이사국으로 선임됐다. 또한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 등에 진출해 발언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이 핵 비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으로 선임됐다. 이사국 11개국이 참여한 IAEA이사회는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 주요 핵검증의제 외에도 기술협력 사업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속하지 않은 국제기구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인근 아시아 우방국가와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신(新)아시아 외교'를 펼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상반기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국제 금융위기,



정부는 IMF 요청사업으로 지난 3월 말 아시아 지역 공무원들을 초청해 금융안정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현황

기구	주요 활동	가맹국	한국 지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환거래 안정 및 국제수지 조정 지원	1백85개국	1.35%
세계은행(WB)	개발도상국(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 및 기술자문	1백85개국	1.01%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개도국의 빈곤감축 및 경제개발 지원	67개국	5.0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동부 유럽 정치·경제체제 전환국의 시장경제 전환 지원	62개국	1.01%
AfDB	아프리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감축 지원	77개국	0.45%
IDB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감축 지원	47개국	0.002%

*자료: 기획재정부(2009.12)

기후변화, 식량·에너지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의 강점을 살린 국제기구 협력사업도 활발하다. 정부는 IMF와 공동으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 동안 아시아 지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금융안정 정책'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아시아 20개국에서 거시경제, 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가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IMF가 우리나라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높이 사 요청한 것이다.

아시아와 중동 국가 31개국의 경제협력체인 아시아 협력대화(ACD)에서 한국은 'IT 협력사업 선도국(Prime Mover)'을 맡아 2004년부터 매년 IT 연수생 초청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자정부 시스템통합(SI)과정, 국가정보화과정, 정보보호과정을 개설해 ACD 회원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38명이 다녀갔다. 올해도 4개 IT과정을 개설했으며, 첫 과정으로 3월 말에 12명이 전자정부 SI 연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 참여한 몽골 국세청의 배타야 자미안 씨는 "세계 1위 수준인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였다"며 "이 노하우를 몽골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G** 글·최은숙 기자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유치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한 달 앞둔 오는 10월 제4차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AMCDRR)가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열린다.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자연재해에 맞서 국제 공조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한국은 이제 각종 재해대응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것이다.

● 우리나라 신흥여행객들이 선호하는 태국의 휴양지 푸켓. 2004년 12월은 아름다운 휴양지 푸켓이 생지옥으로 변한 날이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생겨난 지진해일이 푸켓 해안으로 밀려들며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 한국인 신흥부부들도 파도에 휩쓸렸다. 당시의 남아시아 각국에 닥친 지진해일로 모두 22만명이 사망했다. 이후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8만6천명이 사망했고, 한 달 뒤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13만5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사이클론,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앙이다. 하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준비는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각국 정부의 몫이다.

아시아 62개국·유엔 기후변화 관련 기구 대표 대거 참석

최근 특히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참여해 결성한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AMCDRR) 제4차가 오는 10월 25~28일 인천 송도 컨



아시아 각지의 재난현장 구조에도 한국은 빠지지 않는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원들이 2008년 5월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벤시아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재해위험 경감'을 주제로 개최된다. 우리나라 소방방재청과 유엔 산하 국제방재전략 기구인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ISDR)가 주관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번 제4차 AMCDRR에는 아시아 62개국 재난 관리 장관급 인사와 유엔기구 대표단 등 8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 인도지원국(UNOCHA),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기상기구(WMO), 유엔 환경계획(UNEP),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유엔의 기후변화 관련 기구 대표들이 대거 한국에 온다.

AMCDRR 결성은 2004년의 남아시아 지진해일 참사가 계기가 됐다.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해위험 경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유엔 주관으로 전 세계 1백68개국 관계 장관들이 2005년 일본 고베에서 모여 각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방재전략을 담은 '효고 행동계획'과 '효고 선언'을 채택했다.

'효고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아시아 지역이 공동으로 재해경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AMCDRR가 개최됐다. 이어 2007년엔 인도 뉴

델리, 2008년엔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됐으며, 팔라렘푸르 회의 당시 2010년 한국 개최를 합의했다.

소방방재청은 기후변화를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계기로 보고 제4차 AMCDRR 한국 유치를 확정하기 위해 2008년 초부터 ISDR 사무국과 협의하고 주요 회원 국가들에게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왔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중추적 역할"

이번 제4차 AMCDRR에는 개회식과 폐회식, 전체회의, 전문회의의 등 공식행사 외에도 △기후변화 방재산업전(10월 25~28일) △재해위험 경감 분야 국제기구 및 국가 홍보전시 △국내외 방재 관련 연구기관, 단체의 학술세미나 등 학술 및 전시행사가 개최된다.

소방방재청 강병화 방재관리국장은 "이번 회의를 한국이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제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며, 대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녹색성장 국가 시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 대응 국제공조 플랫폼 만들겠다"

"재해관련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이 의제를 선점해 '폭넓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연수(57) 소방방재청장은 제4차 AMCDRR 한국 개최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 청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소방방재청장에 임명됐다. '소방방재' 하면 화재나 수재 같은 당장 시급한 재난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후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변화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자연재해입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재앙이죠."

박 청장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면 즉각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생존'이며 당장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이 바로 방재"라며 "기후변화를 이슈로 다룰 것을 제3차 AMCDRR에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재해위험 경감'이란 의제가 설정되고 한국 유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3월 24~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MCDRR 준비회의' 격인 ISDR 아시아지역회의(IAP)에 참석해 한국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영철 기자

박 청장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AMCDRR를 통해 우리가 구축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등 첨단 방재기술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함은 물론, 방재산업 관련 국제 마케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방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공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회의들이 대개 지루하고 재미없는 '말의 성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참석자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재미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명배 기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명이사 김성일 서울대 교수 “WCC 제주 유치는 선진국 진입 기회”

〈세계자연보전총회〉

세계 최대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이사회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인. 바로 서울대 산림과학부 김성일 교수다. 지난해 2월 IUCN의 지명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아시아지역 책임자가 된 김 교수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우리나라가 생태관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해 11월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2012년 개최지를 제주로 결정했다.

1948년 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NGO) 연합체로 창설된 IUCN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실질적 심사권을 갖는 등 국제적 권위가 높은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IUCN 이사회에서 서울대 산림과학부 김성일(52) 교수가 지명이사로 선정됐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한국인의 이사회 진출을 허락지 않던 IUCN이 김 교수에게 지명이사 자리를 내준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지명이사는 4년 임기 동안 이사회(38명)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정책적 제안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간 IUCN은 개인의 전문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해 지명이사를 선정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20년간 저술과 강연, 정부 위원회, 비정부기구 활동 등을 통해 자연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경보전활동과 아시아 지역 내 환경협력관계를 강조해왔다. 5년

전에는 농촌지역 공동체 교육센터를 설립, 명예학장으로 자원 봉사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해왔다. IUCN으로부터 이러한 이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현재 IUCN의 산하기구인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의 아시아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WCC 유치에 힘을 보태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더욱 바빠진 김 교수를 3월 말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났다.

한국인 최초로 IUCN의 지명이사로 선정된 소감은.

2007년 람사르 사무총장에 입후보하고 최종 면접자로 스위스에 초청됐는데, 마지막 인터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탈락해야 쉬움이 컸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영광이 주어져 감개무량하면서도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 세계 환경문제 해결과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할 일이 많음을 느끼고 스스로 헌신하자고 다짐했다.

IUCN 이사로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재정회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한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IUCN의 예산이 2천억원에서 1천7백억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해 장기지원금 확보와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뛰고 있다. 또한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의 아시아 의장으로서 지역 내 세계자연유산 등재보고서에 직접 관여하고, 독도를 유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영토로 바로잡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2012년 WCC 개최가 한국에 가져다줄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나.

WCC 참가 인원은 IUCN 및 유관기관 회원, IUCN 6개 위원회, 주최국 대표단 등 6천명에서 8천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WCC 개최로 직접적인 경제효과 9백억원, 홍보효과 4백억원 등 1천3백억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 2012년 6월 해양생태에 초점을 맞춘 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9월 WCC가 연달아 열리고, 아직 유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11,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의 한국 개최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환경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환경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은 선진국 진입의 기회이기도 하다.

IUCN이 제5차 WCC 개최지로 제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 1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열린 마음으로 행사 유치를 간절히 바란 점이 주요했다.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제주의 지원신청 보고서가 경쟁 상대인 멕시코의 것보다 월등히 좋았다. 환경부와 외교통상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 성산 일출봉.

부, 국정원, IUCN 한국위원회 등의 헌신적인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3월 5일 IUCN이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체결한 2012 WCC 양해각서(MOU)의 골자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로 MOU를 체결했다. 이들 3자는 WCC를 오는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WCC를 통해 제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활용해 녹색성장 비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한 '제주환경리더스포럼'을 창설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WCC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재정 지원 등에 대한 2차 MOU는 10월 말 이전에 체결하기로 했다.

IUCN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4대 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전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한다. IUCN의 다수 이사들과 직원들은 총회 개최지로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맹과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총회 개최를 계기로 IUCN을 좋은 의미에서 활용했으면 한다.

IUCN 이사로서 앞으로의 포부는.

총회 개최 때까지 비무장지대 평화공원화, 북한 생태 복원, 아시아 산림훼손 방지,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환경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

또 한국인이 앞으로 이사직, 더 나아가 총재나 사무총장 직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연맹 사무국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진출하도록 인재 양성에도 힘을 것이다.  글 · 김지영 기자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인

국제기구서 활약하는 글로벌 코리안들

‘세계 속 한국’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코앞에 두고 한국의 위상은
‘무한상승’ 중. 그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 여성으로는 유엔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부고등판무관이 약수를 나누고 있다.
강 판무관 옆은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국제기구 진출 현황에 따르면 유엔사무국, 유엔 산하단체 및 전문기구, 국제금융기구, 정부 간 기구 등에 진출한 한국인은 총 3백26명이다. 10년 전인 1999년(1백93명)보다 1.7배 정도 늘었다. 이 중 유엔본부를 포함한 29개 유엔 기구에 진출한 인원이 1백89명으로 가장 많다. 기구별로 보면 유엔본부 45명, 국자원자력기구(IAEA) 27명, 유엔아동기금(UNICEF) 13명, 유엔개발계획(UNDP) 10명, 유엔환경계획(UNEP) 9명, 세계보건기구(WHO)에 8명 등이 진출해 있다.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한 사람은 6개 기구에 1백14명. 세계은행에 44명의 한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에 37명이 진출했다. 정부 간 기구엔 13개 기구 23명이 활약하고 있다. 국제쌀연구협회(IRRI)에 6명, 한국경제에 영향력이 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3명이 진출해 있다. 이들 가운데 국장급(D-1) 이상 고위직은 32명. 국제기구 사무국에 19명, 그리고 각 국제기구 선출직 의장단과 위원(9명), 국제재판소 재판관(4명)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나아가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드높였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분쟁을 중재하는 막강한 권위를 지닌 자리. 가나의 코피 아난 전 사무총



장에 이어 2006년 8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반기문 총장은 2012년 12월까지 한국의 리더십을 세계에 알린다.

아나운서 출신인 강경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고등판무관(Deputy High Commissioner)은 한국 여성으로는 유엔에서 역대 최고직을 맡으면서 국제인권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성균관대 법학과 이양희 교수는 2003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07년 5월엔 위원장에 올랐다.

최순홍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은 유엔본부 내 핵심 부서에 진출한 드문 전문가로 꼽힌다.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은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유엔 개혁작업의 결과 지난해 7월 마련된 자리로 유엔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영수 서울대 의대 교수는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으로 선출돼 보건의료 분야 및 기구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국제사법기구의 대표자도 한국인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함께 양대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지난해 3월 송상현 ICC 재판관을 소장으로 선출한 것. 국제형사재판소는 비인도적인 전쟁이나 대량학살 범죄 등을 저지른 범인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기구로 2002년 7월 출범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 소장이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나란히 국제법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유엔 분담금 비율에 비해 국제기구 진출 인원은 적어

법률 분야에선 또 고려대 법학과 채이식 교수가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의 5선 의장이 됐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양 관련 협약을 맺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특별전문기구로, 법률위원회는 국제해운 및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법 규정을 제정한다. 국제법률경영대학 유병화 총장도 2008년 5년 임기의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집행이사에 당선됐다.

이처럼 고위직 배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유엔의 정규 예산 분담금 비율을 고려하면 아직 우리 몫을 제대로 채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유엔 예산 분담비율은 2.173퍼센트(약 5천만 달러)로 1백92개 유엔 회원국 중 11번째 규모이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을 분담하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 유엔본부 등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유엔 예산 분담률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인력 규모 확대 추진 등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글 · 유재영 기자

유니세프 안성기·UNHCR 신철·WFP 장동건... 국제기구 친선·홍보대사로 활약

국내 유명인사들도 국제기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명예 고위직인 친선·홍보대사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대사' 하면 영화배우 안성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91년부터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친선대사로 국내외에서 어린이 권리 신장 및 기금 마련 활동을 해왔다. 소설가 박완서, 첼리스트 정명화, 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도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만화영화 '로봇대권'을 제작한 '신씨네'의 신철 대표와 로봇대권V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친선 사절이다. UNHCR 한국 대표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로봇대권V의 이미지와 국제사회 약자의 편에 서는 UNHCR의 임무가 잘 맞아 떨어져 임명을 결정했다.

영화배우 장동건은 2008년 세계식량기구(WFP)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세계식량기구는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식량 원조와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 드류 베리모어, 워런 버핏 회장의 아들인 하워드 버핏, 브라질 축구 스타 카카(레알 마드리드) 등이 장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식량기구 홍보대사다.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현황 (2009년 12월 기준)

●국제기구 사무국 국장급 이상 간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최영진	코트디부아르 담당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강경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
김원수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
최순홍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
김광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아태지역 사무소장
김문화	유엔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단장
박영우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 사무소장
손귀엽	유엔개발계획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윤여철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 국장
최수향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짐바브웨 사무소장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성진	국제해사기구 예산부국장
김은주	국제전기통신연합 아태지역 사무소장
민경래	국제해사기구 협력부국장
박종균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국장
소만호	식량농업기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이현숙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아태정보통신기술센터 소장

●국제기구 선출직 의장단/위원회 위원(장)

김재욱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
김판석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박용안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박해운	분담금위원회 위원
유병화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
이만기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이양희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정진성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채이식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권오곤	유고국제전법재판소 재판관 겸 부소장
박선기	르완다국제전법재판소 재판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제기구 취업 성공기&취업 가이드

국제 이슈 ‘열공’ 인턴십으로 ‘실전훈련’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만 ‘세계 평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세계인으로 지구촌을 껴안는 당찬 포부를 지녔다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힘쓰는 국제기구에서 날개를 한껏 펼칠 수 있다.



UNHCR 조현경

2008년부터 2년간 UNHCR 스리랑카 본부에서 일한 조현경 씨는 “JPO 경험이 국제기구 직원으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스리랑카 난민캠프에서 일하는 조 씨.

●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이 사라졌다며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가슴도 무너졌어요.”

지난 2년 동안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스리랑카본부에서 일한 조현경(32) 씨는 아직도 당시 상황을 잊을 수 없다. 26년여에 걸친 기나긴 스리랑카 내전은 결국 지난해 5월 반군의 패퇴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내전의 아픔은 계속 됐다. 보급자리를 잃은 28만명의 난민들은 구호캠프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조 씨는 구호모금을 위한 기획을 담당했지만, 매일같이 캠프를 찾아 구호물품을 챙겨주고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호실태를 조사했다. 현재 잠시 귀국해 UNHCR 한국본부에서 일하는 조 씨는 “인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한몫한다는 것이 이 일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조 씨와 같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3백26명으로 집계됐다. 유엔 사무국과 유엔 산하 및 관련 기구에서 일하는 인원이 6만2천6백97명(2009년 6월 말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은 미미한 수준. 그러나 세계화 추세에다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오르면서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도전정신과 외국어 실력으로 무장한 2030세대들은 ‘세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국제기구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크게 네 가지의 길이 있다. △유엔 국가별경쟁시험(NCRE)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국제기구 인턴십 △공석(空席) 공고 지원 등이다.

유엔은 매년 가입국의 예산금 분담 규모와 지리적 배분 원칙



유엔거버넌스센터의 김정태 씨(오른쪽)는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국제 이슈 전문가로서 어떤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말 UNESCAP과 공동으로 연 녹색성장 역량개발 세미나.

에 따른 국가별 안배로 적정 진출 수준을 정한다. NCRE는 적정 진출 수준에 미달하는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뽑는 인원과 분야는 일정치 않다. NCRE 지원요건은 공고된 주요 시험 분야에 관련된 만 32세 이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해야 한다.

JPO도 국제기구 진출을 노리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정부는 JPO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엔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에 수습직원을 2년간 파견, 근무시킨 뒤 정규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 송미영 서기관은 “지난해 5명 모집에 2백7명이 응시해 4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현재까지 JPO 파견기간이 만료된 58명 중 49명이 국제기구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인턴, 정식 채용 가능성 높아 인기”

그러나 소수의 한정된 인원만 뽑는다는 게 이들 제도의 단점. JPO 5기인 조현경 씨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JPO의 한국인 수가 턱없이 적다”며 “국제기구 진출에 유리한 JPO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정규 분담금 납부 순위에서도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매년 고작 5~7명을 모집하는 게 현실. 따라서 인턴십이나 공식 공고 지원 등에 대한 지원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기구는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에 인턴십으로 전문분야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는 필요에 따라 인턴을 뽑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와 지역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턴십이 20, 30대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무보수라 본인이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인턴십을 지원하는 국제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5~30명을 선발해 지원해 왔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 ‘국제환경전문가’ 과정을 신설

“

국제기구는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에 인턴십으로 전문분야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는 필요에 따라 인턴을 뽑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와 지역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

해 환경 업무 관련 국제기구에 14명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국제기구 공식 정보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지만, 해당 국제기구 홈페이지를 틸틈이 살펴보는 것이 좋다. 2005년 국제기구 취업 안내서를 펴냈고 현재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일하는 김바른(32) 씨는 “한 분야의 전문성만 갖추고 있다면 조금해하지 말고 그 경력을 쌓아 공식 공고에 도전하라”고 충고했다.

인터넷 다음 카페 ‘유엔과 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처럼 국제기구에 관심 많은 이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페 운영진인 한재윤(28) 씨는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지구촌 불끄기 행사’ 등 직접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고 국제기구 진출자와 국제 활동가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홍보담당관으로 일하는 김정태(33) 씨는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국제기구가 인생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한다. 김 씨는 유엔본부 인턴십 등을 통해 UNPOG가 국내에 처음 생길 때 지원해 국제공무원의 길을 열었다.

김 씨는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기본이지만, 무엇보다 ‘국제 이슈 전문가’로서 어떤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국제 전문 분야에 대해 알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틸틈이 해보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제기구 취업 길잡이

국제기구

유엔본부 사무국 jobs.un.org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org

유엔환경계획 unep.org

아시아태평양경제위원회 unesap.org

국제기구 취업 정보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채용정보 mofat.go.kr/unrecruit/index.jsp

유엔과 국제활동정보센터 cafe.daum.net/unitednations

여성가족부 국제협력과 mogef.go.kr

환경부 해외협력과 www.me.go.kr

“고마워요, 대한민국”

라오스 교과서, 페루 도자기학교 등 맞춤 원조 인기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적 경제대국이 된 한국은 세계 경제개발사에서 손꼽히는 성공 사례다.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경험을 통해 원조 공여국과 원조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사합니다. 한국이 지원해준 덕분에 우리 학생들 모두 깨끗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동남아시아의 내륙국가 라오스에 가면 많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우리 정부의 원조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라오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정교과서와 함께 현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KOICA 박대원 총재는 “라오스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과서가 보급돼 라오스 공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제도와 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려 라오스의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새 교과서가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라오스 학생들은 질 낮은 교과서를 여러 명이 함께 보며 공부해야 했다. 이제는 태극기와 라오스기가 나란히 인쇄된 깨끗한 교과서를 각자 하나씩 들고 수업을 듣고 있다. 양국 국기 아래에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출판됐다’는 문구가 현지어와 영어로 쓰여 있어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

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잊기 힘든 고마움으로 자리 잡을 듯하다.

‘라오스 교과서 보급 프로젝트’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백만 달러(약 41억원)가 투입돼 3단계로 나뉘어 2백 70여만 권의 교과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9월 3단계 제작과 배포가 마무리돼 라오스 중학생 24만 8천명과 고등학생 15만 1천명 모두가 우리나라가 지원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전 학년 전 과목 교과서가, 중학생들에게는 전 학년 국어교과서가 지원됐다.

또 교과서 발간과 보급, 인쇄기기 등 기자재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및 인쇄출판 전문가 파견, 라오스 현지 기술자 초청 연수 등 인적 지원, 인력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4월 1일 창립 19주년을 맞은 KOICA는 라오스뿐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 빈곤 퇴치 등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재난 및 분쟁 후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라오스 중고생에 교과서 270여만 권 지원

1969년 우리나라는 8백억원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정부 예산 규모가 3천억원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공적개발원조(ODA)로 ‘연명’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0년이 지난 2008년 우리나라는 8억 2백만 달러(약 9천 81만 93억원)를 다른 나라에 지원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를 남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것이다. DAC는 세계의 핵심 공여국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1961년 OECD가 설립된 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회원국이 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은



라오스 중고교생 39만 9천명이 한국 정부의 원조로 제작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태극기와 라오스기 아래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출판됐다’는 문구가 써여 있다.



페루 쿠스코 도자기학교에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이 한국의 우수한 도자기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현지 농민들은 관광객들에게 도자기를 팔아 2배 이상 소득을 늘렸다.

대부분의 국가가 부패한 정치 환경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됐지만 한국만 그 수렁을 빠져나왔다”며 “국제무대에서도 원조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DAC 가입국 중 개도국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 이런 경험을 살리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원조 수원국(受援國) 간의 연결고리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적 측면…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

DAC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대외 원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8·15광복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선진국에게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과거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국제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2008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퍼센트, 이는 유엔 권고수준인 0.7퍼센트의 약 8분의 1, DAC 회원국 평균 0.3퍼센트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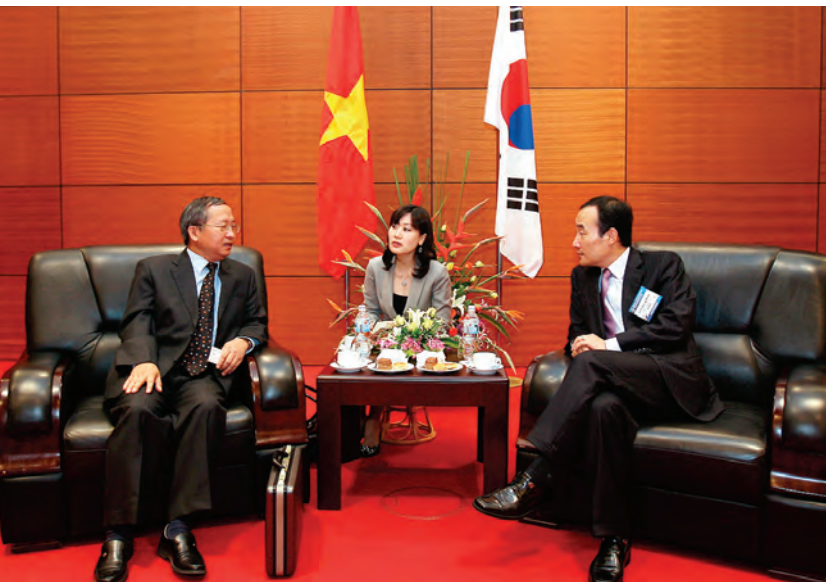
2010년을 ‘ODA 선진화 원년’으로 삼고 GNI 대비 ODA 규모를 2012년까지 0.15퍼센트,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절대 빈곤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원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빈국에 대해서는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되 효과를 감안해 맞춤형으로 건설이나 인적 자원 개발, 성장경험 전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외 원조 확대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공적개발원조 팀장은 “앞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이 중요한 전략 과제”라며 “우리의 경제력 및 국격(國格) 향상에 상응해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 이혜련 기자



개발도상국에 ‘고기 잡는 법’ 가르친다

6·25 참전국 등에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 전수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스승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도국들로부터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배우기 위한 ‘수강신청’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컨설팅을 해주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 옛그제까지도 개도국이던 한국이 경제발전의 본보기가 되면서 국격(國格)을 높여가고 있다.

● “무사자통(無師自通)에 따른 마고소양(麻姑搔癢)의 경지에 오른 것이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스승도 없이 경제발전을 이뤄낸 한국(無師自通)이 이제 다른 나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위치(麻姑搔癢)에 까지 올랐다는 얘기다. 이처럼 한국만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해주는 KSP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정책자문 사업으로, 또한 대표적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시작한 KSP사업은 올 들어 11개국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관련 예산도 2004년 10억원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5배 늘었다. 또한 중점지원국 제도를 도입해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매년 지원 수준을 높여왔다.

이렇듯 우리 정부가 수업을 성실하게 챙기다 보니 ‘수강생’ 국가들의 참여도와 성취도도 높다. 베트남 등 그간 한국에 경

제발전 경험 전수를 요청한 국가는 우리 정부의 정책 컨설팅 결과를 자국 정책에 속속 반영하고 수시로 후속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KSP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15개국 1백34개 과제에 대해 정책 컨설팅을 시행했다. 베트남은 2004년 수출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6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과 유사한 베트남개발은행을 설립했다. 또 수출신용보증기구의 운영과 신용보증기금 설립, 수출보험제도 도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 정부에 추가 의뢰했다.

KSP, 베트남 등서 시작해 올해 11개국으로 늘어

자본시장 발전을 꾀해온 인도네시아엔 2005년 채권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딜러제도 도입, 표준화된 채권발행 시스템 구축, 채권시가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본시장 발전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정책 컨설팅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해 실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전용공단인



외교부 제공

◀◀ KSP사업의 첫 수혜국이자 중점지원국인 베트남은 수출 관련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한국 정부에 수시로 의뢰하고 있다.
◀ 아제르바이잔은 한국 정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받아 2008년 WTO 가입 협상에서 활용했다.
▲ 터키 등 6·25 참전국에도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한다.

“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6·25 참전국에도 ‘특별과외’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원 후보 대상국에도 참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가 포함돼 있다.

KSP사업을 원하는 참전국에 대해서는 최소 3년간 ‘중점지원 국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특별경제자유구역(Special Economy Zone) 설립을 제안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8년 12월 나보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지난해엔 나보이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끝마쳤다.

소비자 금융시장 활성화를 희망했던 알제리는 신용카드 도입과 운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컨설팅을 토대로 2008년 전자결제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필요한 서비스·농업, 무역규제 제도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8년 WTO 가입 협상 때 한국 정부의 조언 내용을 활용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노하우 전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제프리 삭스 교수는 2007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공적개발원조(ODA) 회의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2006년 10월 한·아프리카 장관급경제회의에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카베루카 총재는 “아프리카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노하우”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도 이에 따라 기존의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3개국을 중점지원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전통적 자원부국, 아프리카·남미 등 지역별 경험거점국가, 절대적 경제지원이 필요한 최빈국을 중심으로 16개 지원 후보 대상국을 선정하고, 회신이 있는 10개 안팎의 국가를 선별해 KSP사업을 전개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중 우수 사례를 모듈화(정리)해 사업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0개, 2012년까지는 1백여 개의 대표적 경험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정책 혁신 및 실패 사례,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대상국의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한 ‘국별 수요지도’도 작성해 대상국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국식 ‘질적 원조’... ‘맞춤형 지원’ 이뤄져

한국의 발전 경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우수 컨설턴트도 육성한다.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고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전직 고위관료나 국제기구 종사자 등의 전문가 그룹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스타 컨설턴트’로 배출한다는 것.

KSP를 통한 정책 제안은 물론, 정책 제안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기법이 ‘윈스톱’으로 일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유·무상 원조단체와의 연계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KSP사업을 대상 국가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Fee for service)으로 재편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에도 ‘특별과외’를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형환 대외경제국장은 “국제사회에 결초보은(結草報恩)한다는 의미에서 참전국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KSP사업에서 참전국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전국인 터키에는 이미 2008년에 클러스터 및 산업고도화 정책 모델과 산업협력, 지역발전 등에 대해 도움을 준 바 있다. 올해 선정한 KSP 16개 지원 후보 대상국에도 6·25전쟁에 참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가 포함돼 있다. 지원 후보국엔 없지만 KSP사업을 원하는 참전국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전반을 최소 3년간 포괄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중점지원 국가’에 포함시킬 방침.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지난 2월 26일 2010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모듈화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한국 고유의 경제발전 모델을 통해 한국의 수원국(受援國)들이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고 최대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유재영 기자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세계 곳곳에서 나눔 활동하는 민간자원봉사 단체들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해외봉사활동이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종과 국경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일궈나가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아름다운 활약상을 소개한다.

●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김민석(22) 씨는 지난해 해외봉사단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코피온(COPION)의 주선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다. 파라과이에서 먼저 해외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누나의 권유로 필리핀 땅을 밟은 김 씨는 마닐라 근교의 소도시에 자리한 보육원에서 6개월 동안 아이들을 돌봤다.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이라는 미션을 잘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지만,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먹고 자고 울고 웃는 삶을 반복하면서 값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곳에선 폭폭 찌는 더위에도 선풍기 한 대로 행복했고, 책장 틈으로 쥐들이 돌아다니는 방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늑하고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부족함 없는 상황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고, 어느

새 아이들과 함께 웃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최근 들어 김 씨처럼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때로는 휴학이나 전액 자비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원봉사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경험자들은 “배우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종교와 인종, 국적을 초월해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까지는 국제구호단체들의 활약이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유니세프 등 활동 활발

현재 국내 정착에 성공한 국제구호단체로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해비타트, 컴패션, 유니세프, 기아대책 등이 꼽힌다.

굿네이버스의 가족나눔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변정수 씨 가족은 지난해 3월 인도의 빈민가를 찾아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빈곤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굿네이버스

이들 국제구호단체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참여시킨 것.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가 좋은 스타들의 활발한 해외자원봉사는 국제구호의 저변을 넓히고 일반인들의 봉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촉매 구실을 하고 있다.

탤런트 김혜자(69) 씨와 정애리(50) 씨를 친선대사로 둔 월드비전이 대표적이다. 세계 1백 개국에서 구호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월드비전은 1950년 전쟁으로 신음하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처음 생겼다. 1991년 월드비전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역사적 전환을 이뤄냈고, 1992년과 94년에 각각 김 씨와 정 씨를 친선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꾸준히 에티오피아, 잠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기아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난민 돕기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 사이 '자원봉사의 대모'라는 애칭도 얻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열기를 이어받아 아나운서 박나림 씨, 탤런트 한혜진, 이훈, 김효진, 지진희 씨 등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1946년 창립 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온 유니세프는 1995년에 한국위원회를 설립했다. 당시 5천명이던 회원 수는 현재 15만명으로 늘었으며, 개발도상국 지원 규모도 설립 첫해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한국기아대책, 북한 등 72개국 빈곤퇴치 등 지원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한 굿네이버스는 국내에서 아동권리 보호사업과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의 빈민아동 돕기에도 열심이다. 또 해외 23개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도 벌인다. 현재 탤런트 최수종 씨가 친선대사, 변정수 씨 가족이 가족나눔대사로 뛰고 있다.

1952년 한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 탄생한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은 일대일 결연 프로그램으로 세계 26개국의 어린이 1백1만여 명을 지원해왔다. 2005년부터 탤런트 신애라 씨가 홍보대사를 맡아온 한국컴패션도 아이티를 포함한 26개국의 어린이 7만명을 후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 호주,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 특히 아이티 어린이 후원에는 선·정혜영 씨 부부 등 많은 연예인이 참여하고 있다.

1976년에 설립된 해비타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세계 1백 개국에서 벌이고 있다. 한국해비타트도 1995년 문을 연 후 국내에서 1천4백 가구의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쳤으며, 해외에도 매년 5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지금까지 2천여 가구의 보금자리를 지었다. 2003년부터 꾸준히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탤런트 이재룡·유호정 씨 부부는 집짓기 현장을 찾을 때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술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때로는 휴학이나 자비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종교와 인종, 국적을 초월해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까지는 국제구호단체들의 활약이 큰 영향을 끼쳤다.

”



한국 해비타트

한국해비타트는 매년 5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해외로 파견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촌의 굶주린 이웃에게 식량과 사랑을 전하는 기아대책은 1971년 미국에서 출발했다. 한국기아대책이 설립된 것은 그로부터 17년 뒤인 1989년. 당시에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7개국을 돕던 한국기아대책은 현재 북한을 비롯한 세계 72개국에서 빈곤 퇴치, 의료보건, 수자원 개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홍보대사인 배우 조민기 씨가 직접 아프리카를 찾아 물 부족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담은 사진은 우물 파기 봉사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상은, 다른 이를 성심껏 도울 때 자기 자신의 삶 또한 나아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명언처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지름길이다. **G** 글·김지영 기자

교통문화 캠페인 나선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모두 안전띠 하면 매년 600명 살린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자동차 안전벨트 매기는 교통문화 수준의 척도이고, 교통문화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대변해준다. 교통안전공단의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은 우리 교통문화를 선진화하고,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국가 품격을 높이는 실천운동이다.

● 지난 3월 30일 강원도 삼척시 7번 국도에서 여객버스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잇따라 충돌한 뒤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기 때문이다.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의무화된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일반도로 등으로 확대했을 경우 연간 5백77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으로 연간 23명의 어린 생명을 구하게 되면 매년 약 6백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정상호(53) 이사장은 이처럼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3일 제주도에서 중학생 축구단을 태운 전세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며 건물과 부딪치려 할 때 마침 운전 중이던 지도교사의 기지로 전원

이 안전벨트를 즉시 착용해 대형 참사를 막은 일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 도로, 철도, 항공 분야의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7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 등 육·해·공 전 분야를 망라한 물류·교통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항공안전본부장 재직 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률(98.82퍼센트)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 지난해 4월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교통 후진국으로 불리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천8백38명으로 하루 평균 16명꼴, 부상자는 36만여 명으로 하루 9백30명꼴이었습니다. 특히 한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명)보다 2배 이상 많은 3.17명을 기록했죠. 이는 OECD 29개국 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교통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진 셈입니다. 사망사고 내용도 ‘후진국형’입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가 많고 △보행 사고가 30퍼센트에 이르며 △노약자 사고 비율이 높고 △사업용 차량의 사고 비율이 일반 차량보다 5배 높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안전벨트 착용이 줄고 있다는데요.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던 2002년 안전벨트



어떤 길, 어떤 차량에서든 모든 좌석 안전벨트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띠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며 버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선진 교통문화가 보인다.

착용률은 98퍼센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락해 2008년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70.2퍼센트,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석이 89.3퍼센트로 떨어졌고 △조수석은 78.2퍼센트 △뒷좌석은 3.9퍼센트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2010년 2월 현재 1천7백42만 대)하고 있는데도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선진국의 안전벨트 착용 현황은.

우리나라에선 운전석과 보조석의 안전벨트 착용은 어디서나 의무지만, 뒷좌석의 경우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따로 없습니다. 반면 어디서나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펼치고 있는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TS문화벨트' 캠페인을 지난해 시작해 올해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의 이니셜을 딴 'TS문화벨트' 캠페인은 모든 좌석 안전벨트 매기와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주변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죠. 올해는 이 캠페인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답게 국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TS문화벨트' 캠페인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우리 국민의 자연스러운 운전습관으로 정착한다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90퍼센트가 시설 요인이 아니라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문화의 변화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당부할 얘기가 있다면.

개인의 운전습관이 인격을 보여주듯, 한 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국가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이 향상되면 더불어 국가 품격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공단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운이나 우연이 아닌데도 마치 운이 나빠서 또는



조영훈 기자

안전벨트 착용을 교통문화의 향상,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TS문화벨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안전띠를 매자” UCC 공모전

교통안전공단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5월 31일까지 '내가 만든 모든 좌석 안전띠 매기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총 상금 2천1백만원이 주어진 UCC를 공모한다.

이 공모전에는 고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모든 좌석 안전띠 매기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UCC나 플래시 등 동영상으로 제작해 교통안전공단 접수처(공모전 홈페이지 award.ts2020.kr)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5명, 동상 10명 총 19명이다. 대상은 국토해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백만원, 금상은 국토해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백만원, 은상과 동상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1백만원과 50만원을 받게 된다. 당선작은 6월 21일 발표 예정.

문의 Tel 1577-0990

재수가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확률이고 과학이며 문화입니다. 확률과 과학으로서의 교통사고는 안전설비와 시설투자 등을 통해 가능성을 줄여왔습니다. 이제 문화 차례입니다. 모든 좌석 안전벨트 매기는 바로 문화의 변화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문화 변혁의 시작입니다. 

글 · 박경아 기자

4월부터 달라진 조세제도

전기 먹는 가전제품 세금도 더 낸다

정부가 4월부터 8가지 조세제도를 변경했다. 각 사안별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조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작게는 에너지 고소비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크게는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면서 합리적 조세제도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뀐 조세정책이 4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세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된 반면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되는 등 8개 분야 조세제도가 달라졌다.

변경된 8개의 조세제도 가운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항목이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5퍼센트에 개별소비세액의 30퍼센트인 교육세가 가산되므로 실제로는 6.5퍼센트 가량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백70킬로와트시(Wh) 이상 제품에만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며, 정격냉방능력 10킬로와트 이상 제품은 대부분 업소용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호사·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냉장고 과세 대상은 월간 소비전력량 40킬로와트시 이상 제품. 단 용량 6백 리터 이하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드럼세탁기는 1회 소비전력량 7백20와트시 이상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TV는 정격소비전력 3백 와트 이상 제품



4월 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에 대해 과세한다. 단 디지털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화면 대각선 길이 1백7센티미터) 이하 제품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될 예정이다.

또 4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됐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지만, 4월부터는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 50퍼센트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 20퍼센트 상당(거래 건당 3백만원, 같은 신고자에게는 연간 1천5백만원 이내 액수만 지급)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골치 아프게 여기는 세무조사 제도도 개선됐다. 수입 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기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단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의심되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4퍼센트에서 연 4.3퍼센트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국세를 돌려받으면서 그로 인한 이자 손실이 줄어들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과세제도 체계적 정리...정확하게 세금 매긴다

이 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이 3.4 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상향됐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이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간주임대료 계산 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상향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유흥주점 등이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1백4분의 4로 축소됐으며,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이 추가됐다.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불확실하게 매겨지던 기존의 과세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제도도 개선됐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문의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 환경에너지세제과(02-2150-4251)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 소득세제과(02-2150-4151),

법인세제과(02-2150-4171), 조세정책과(02-2150-4113, 4115)

세무조사제도 보완 : 조세정책과(02-2150-411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 : 조세정책과(02-2150-4115)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31)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 범위 확대 : 재산세제과(02-2150-4214)

관세제도 개선 : 관세제도과(02-2150-4412)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개편 :

FTA이행T/F(02-2150-8063)

효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도 기존의 기관발급방식, 자율증명방식 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도입됐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정준 사무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조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분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이란 두 마리 토끼도 함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

글 : 문상훈 객원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서캠퍼스 컴퓨터출판디자인과 학생들 중에는 이전 학교에서 어문 또는 인문학을 전공한 후 다시 이 학교에 입학해 출판사나 신문사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이 원하는 ‘멀티인재’로 구직·구인난 한방에 해결

한국폴리텍大 융합형 교육 인기

두 개 분야 이상의 교육을 결합해 산업현장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구인·구직자 모두 귀를 쫓긋할 만한 얘기다. 바로 이런 융합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융합형 교육훈련 시스템(크로스오버) 학과가 인기다. 목표대로 된다면 고학력 청년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의 수중공사 전문업체 오서니어링(Oceaneering)사에 근무하는 박호진(30) 씨의 연봉은 1억5천만원이 넘는다. 가천길대학 관광통상영어과를 졸업한 박 씨는 산업잠수와 해외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2006년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에 입학했다.

산업잠수사로 해외에 취업하려면 영어가 능숙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박 씨는 국제산업잠수자격(ADCI)을 따내기 위해 야간에도 잠수 실습을 하고 영어 전공을 살려 영어 동아리를 꾸려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등 1년간 착실히 해외취업을 준비했다.

그 결과 동력수상레저지구 조종면허 1급, 잠수기능사, 국제산업잠수자격 등을 갖추고 2007년 해외잠수작업이 활발한 싱가포르를 선택해 취업에 성공했다. 박 씨의 지도교수였던 정의

진 교수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중로봇작업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향후 한국 최고의 해양기술자로 활동할 것”이라고 박 씨를 평가했다.

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난 없어

올해 한국폴리텍Ⅲ대학 원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학과를 졸업한 이은기(28) 씨는 융합형 인재로 꼽힌다. 2006년 연세대의용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의료공학연구원에 취업했지만, 기계 분야 전문기술이 없어 보조연구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전문기술을 배워 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 씨는 2009년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했다. 지도교수와 밤늦게까지 실습에 매달린 결과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수치제어밀링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했

고 졸업 전인 지난해 11월 의료기기제작 회사 '아이센스'에 취업했다. 의용공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계설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현대는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통섭(統攝)이 대세다. 휴대전화만 봐도 원래의 통화 기능에 TV 시청은 물론 인터넷도 가능해졌다. 사람도 한 분야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다른 분야의 기술을 더하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융합형 인재는 취업난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 교육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가 청년 구직자 9백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3퍼센트가 "현재의 대학 교육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52.6퍼센트가 '실무보다 이론 위주의 교육이 많아서'를 꼽았고, 46.9퍼센트가 '전공 수업이 전문성을 살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 사교육을 받거나 다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크로스오버과정으로 청년실업난·중소 인력난 해소

노동부 산하 정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길러내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꼽힌다. 국가기간산업과 신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 시설과 장비 투자가 많아 실무 중심의 교육, 전문성을 살린 교육, 취업에 강한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폴리텍대학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입학한 사람들이 많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직업교육훈련(기능사 1년)과정은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이 45.4퍼센트였다. 특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크로스오버 시범운영 학과의 신입생 중에서는 77.5퍼센트나 됐고, 크로스오버 9개 학과 중 원주캠퍼스의 컴퓨터응용기계학과, 창원캠퍼스의 컴퓨터응용기계학과와 산업설비학과는 1백 퍼센트 2년제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이들은 기존 대학에서 배운 분야와 전혀 다르거나 유사한 분야의 기술을 배운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배운 학문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새로 배우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통섭되면서 융합형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이를 체계화해 올해부터 9개 학과에 융합형 교육훈련 시스템(크로스오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개 이상의 학문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크로스오버과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융합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크로스오버과정은 한 분야의 전공능력 취득자가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해 현장 중심의 전공능력을 추가로 습득한 후 융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를
졸업한 박호진 씨는
국제산업잠수자격을
만 뒤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의 수중공사
전문업체에 취업했다.

합형 전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훈련 모델이다. 입학 전 전공 분야와 입학 후 한국폴리텍대학의 전공을 결합한 A타입과 한국폴리텍대학 내 기존 전공 직종에 다른 직종의 전공을 결합한 B타입 2가지가 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는 용접기술과 잠수기술을 함께 배우고, 원주캠퍼스 의료기기제작과는 의용공학과 기계제작을 함께 공부한다. 또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컴퓨터출판디자인학과와 경우 이전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출판디자인을 배워 출판사 또는 신문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이는 크로스오버과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연구팀 표정선 교수는 "앞으로도 산업현장 중심의 학사제도와 연계하고 융합교육을 강화해 더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크로스오버 과정이 고학력 청년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G**

글·이혜련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융합형 학과(2010년)

구분	대학 (캠퍼스)	학과	직종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입학률(%)
A타입	서울강서	컴퓨터출판디자인	컴퓨터출판디자인	94.3
	원주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기계	100
		의용공학	의료기기제작	97.0
	익산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기계	57.6
		산업설비	자동화용접	29.0
	창원	컴퓨터응용기계	머시닝센터	100
B타입	진주	산업설비	특수용접	100
	순천	산업설비	플랜트설비	54.5
		비파괴검사	비파괴시험기기 운용	61.8

“학교 교육, 엄마 아빠가 직접 챙긴다”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450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2일 대구에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출범했다. 모니터단으로 임명된 학부모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이제부터는 학부모가 교육현장을 직접 살필 수 있게 됐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이 공식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2일 학부모 모니터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알렸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돼 시범 운영돼왔다. 4백50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모니터단은 지난 1월까지 정책고객 서비스(PCRM)를 5회 개최했고, 아울러 시도 교육청별로 현장 교육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정책고객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 정책, 개정 교과서, 개정 교육과정, 학부모 홈페이지 개설 등 5개 분야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됐다.

그러나 일부 현장 교육 토론회가 실제적 토론회보다는 학교 방문 등 형식적인 행사에 머무르거나 시도 교육청별로 모니터단원 수의 편차가 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별 모니터단 인원 수를 학교 수, 지역교육청 수, 전년도 모니터단 인원을 고려해 배정하고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주제가 있는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체계화했다.

2010년 학부모 모니터단은 총 6백5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과 경기도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경북이 각각 50명, 전남 40명, 충북 40명, 대구 30명, 인천 40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에는 10명이 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 학교, 교원능력평가, 고교 다양화 등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대상 정책과 제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 과제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단이 팀(4명 안팎)을 꾸려 4, 6, 9, 11월 등 모두 4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

연 4회 모니터링 실시…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

모니터단 단원들은 개인별로 오는 12월 15일까지 교육정책 모니터링 제안 및 참여 결과를 A4용지 3장으로 제출해야 하며, 팀별로도 모니터단 활동보고서를 내년 1월까지 작성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각 정책 담당 부서는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단에 제공하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모니터단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타 부처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도 학부모를 1명 이상 참여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위원회에도 학부모가 1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단위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도 늘려나간다.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 담당 이주원 사무관은 “교육청이 단위 학교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부모 위원이 최소 20퍼센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유재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팀 Tel 02-2100-6282

악성코드 프로그램 절반이 엉터리 방통위, 13개 우량 프로그램 추천

●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프로그램 충돌이 생기면 대개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러다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문구가 뜨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비용을 결제하고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악성코드는 제거하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만들거나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라고 지우게 하는 것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에서 제작돼 유통되고 있는 1백 60여 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은 제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9년 하반기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전체 1백60여 종 가운데 1백 8개(67.5퍼센트) 제품이 1천5백 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이하를 탐지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반이 불량... 정상 프로그램 삭제하기도

이는 2009년 상반기 조사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86종(64.1퍼센트)이었던 데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또 정상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잘못 진단하는 오탐 프로그램도 6.7퍼센트(9종)에서 15퍼센트(24종)로 증가했다.

악성코드 치료를 상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이용료
네이버 PC그린	NHN	무료
다음툴바	다음커뮤니케이션	무료
바이러스체이서 (5.0/7.0)	에스지알아이	유·무료(2종)
바이로봇 Desktop	하우리	유료
알약	이스트소프트	무료
엑스퍼트 알약 프리미엄	LG파워콤	ISP 무료
피씨닥터플러스	유에스 엔 코리아	유료
nProtect AVS 2007	잉카인터넷	유료
PC닥터	보안연구소	유료
PC지기	CIS비전파워	유료
Qook 인터넷 닥터	KT	ISP 무료
TC스파이닥터	프리아이커뮤니케이션	유료
V3(365 클리닉/Lite)	안철수연구소	유·무료(2종)

*2009년 12월 31일 기준, 이용료는 개인 사용자 기준.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치료율과 함께 설치 시 동의 확인, 설치제품 제거기능, 진단내역 제공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반면 1천 개 이상을 탐지해 비교적 양호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은 것은 27종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27종 중 설치 시 동의, 민원 대응, 결제방식 등 조사 필수항목을 준수하고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1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오탐, 소액결제 유도, 설치 시 미(未)동의, 치료성능 미달 등의 사유가 나타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경찰청과 협력해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무선 전화결제를 통해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결제 및 본인 동의 없는 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는 휴대전화·ARS결제중재센터에 e메일을 접수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는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제공업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성능과 서비스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악성코드 샘플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국내 침해사고에 악용된 샘플 및 해외 2곳 이상의 지역에서 발견된 신규 악성코드 샘플 등을 포함시켜 실시했다. **글** · 이혜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휴대전화·ARS결제중재센터 www.spayment.org

“선생님도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습니다”

노숙인에게 인문학 강의로 희망의 끈 살리는 최준영 교수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노숙인들. 이들의 무기력한 삶에 관심 갖는 이들은 많지 않다. 최준영 교수는 6년째 이들의 손에 책을 쥐어주며 “인문학을 통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날이 오고 있다. 만개한 꽃잎을 닮은 산뜻한 옷차림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겨우내 움크렸던 몸과 마음을 햇살에 녹인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 한편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춥고 음습한 이곳은 1년 3백65일이 겨울이다. 누군가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만, 실제 길에서 사는 인생은 녹록지 않다. 어찌다 눈부신 봄 햇살을 마주하더라도 그들은 이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린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봄을 느낀다는 것은 ‘사치’이자 ‘수치’이기 때문이다.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 최준영(44) 교수는 이런 그들에게 6년째 따스한 봄날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을 통해서 선물을 전한다.

2005년 9월 그가 성프란시스대학에서 노숙인들을 모아 인문학 강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세상은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었다. 그러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한 인문학은 점차 싹을 틔어나갔다. 재소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가정주부와 직장인들, 그리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인문학은 이제 ‘시민인문학’이란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다.

노숙인에 “선생님”이라 부르며 6년째 강의 중

대체 인문학의 힘이 무엇이기에 노숙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까. 최 교수는 “그런 질문은 술하게 들었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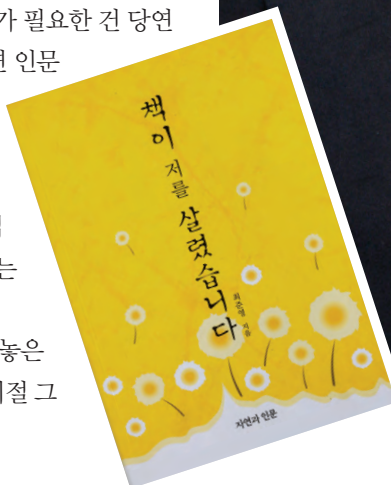
“하루, 이틀을 견디기 위해 밥이나 잠자리가 필요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인생이란 큰 여정을 걸어가려면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다 결국 삶을 포기하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주는 것은 단지 그때뿐입니다. 삶의 방법을 찾기보다 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최 교수가 노숙인 인문학 강의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필연에 가깝다. 어린 시절 그

최준영
교수



최준영 교수는 그간 노숙인, 재소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을 책으로 펴냈다.



는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야학으로 공부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을 하진 않았다. 대신 자신을 가르쳤던 야학 선생님들을 따라 자신도 야학 선생님이 됐다. 그때의 경험 때문에 성프란시스대학 설립자 임영인 신부의 “노숙인들을 가르쳐달라”는 간곡한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글쓰기는 학기마다 가르쳐야 했는데 몇몇 교수님들이 계속 거절했나 봐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그는 노숙인들을 이렇게 지칭했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제 인생 자체가 험난하다 보니 오히려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분들과 어떤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오히려 기대됐고요.”

그를 거쳐간 ‘선생님’들은 벌써 수백명이 넘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 교수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건 첫 제자들이다.

“성프란시스대학 1기 졸업생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선생님이 말기 암 선고를 받았어요. 죽기 전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해 모두가 함께 모여 운동회를 열었죠. 복수가 차올라 거동조차 불편했지만 여러 차례 제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동적인 것은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었어요.”

“그들은 표현하는 법 못 배웠을 뿐”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은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 교수와 그의 동문들은 단 하루라도 장례를 치르길 원했다. 빈소를 찾은 노숙인들은 가족의 죽음을 목도한 것만 같아 끼어들어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닳아 해진 양말 속에서, 시꺼먼 점퍼 주머니 속에서 5천원, 1만원을 슬그머니 꺼내놓고 사라졌다. 그렇게 모인 돈이 1백만원쯤 됐다. 장례를 치르고도 남은 돈이었다.

“선생님들이 감정도 없고 의리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역시 보통사람들입니다. 단지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최 교수는 거의 모든 수업시간마다 독서와 글쓰기를 병행한다.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력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글을 쓰라고 강조한다.

“가장 행복했거나 어려웠던 이야기를 글로 쓰게 한 뒤 발표를 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고생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든 삶을 살았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글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의 발전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문(文) 자가 혹시 ‘무늬 문(紋)’ 자는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인간이 살아온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긴 학문이라는 거죠.”

최 교수는 그들이 인문학을 통해 회복된 삶을 얻길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인문학 강의를 듣고 다시

“

지금은 비록 이런 상태지만 10년 후 가족을 만나겠다든지, 딸의 결혼식에 가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 강의실에서 그분들과 마주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



최 교수는 2005년부터 성프란시스대학, 노숙인 다서서거센터 등에서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은 2005년 12월에 열린 노숙인 인문학 강좌 중강식.

일어선 사람도 있지만, 결국 또 혼자라는 외로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는 이들의 회복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주파수를 꿈꾼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생각해봤어요. ‘57분 배식정보’,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 이들을 찾는 가족들의 메시지 등을 들려준다면 다시 희망의 끈을 찾지 않겠어요?”

녹음이 좀 더 짙어지면 최 교수의 발걸음은 더 바빠질 것 같다. 그가 맡은 글쓰기 강의가 여성 노숙인 쉼터 아가페, 충청로 구세군 브릿지 등에서 시작되기 때문. 그는 매번 강의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실린 니체의 명언을 읊조렸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란 말이 있어요.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비록 이런 상태지만 10년 후 가족을 만나겠다든지, 딸의 결혼식에 가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저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 강의실에서 그분들과 마주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최 교수는 최근 그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고이 간직한 책 한 권을 펴냈다. 그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듯 셋노란 표지가 인상적이다. 그의 첫 제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를 제목으로 삼았다. **G** 글·김민지 기자

세상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네팔·인도 등 오지 마을에
도서관 만드는 여행가 김형욱 씨

오지여행가이며 사진작가인 김형욱 씨는 네팔과 인도에 세 곳의 도서관을 만들었다. 앞으로 10년 안에 1천 개의 도서관을 열고 싶다. 여행하며 만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이제 그의 꿈이 됐다.

● ‘1천 개의 도서관.’ 김형욱(31) 씨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오지라고 부르는 곳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10년 안에 1천 개의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먹고사는 일만으로도 빠듯한 사람들에게겐 너무 크고 화려해 보이는 꿈이지만, 돈이 많아서 베푸는 자선이나 젊음의 객기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를 ‘생활 여행가’라 칭하는 그는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없다. 여행을 다녀오면 통장 잔액은 언제나 0원이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누나 집이나 친구 집에서 얹혀 지낸다. 그런데도 그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될 이유가 없다.’ 요즘 그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다.

무모해 보이는 그의 꿈은 벌써 이뤄지고 있다. 지난 2년 사이에 인도와 네팔에 세 곳의 도서관을 열었고, 다음 주면 네팔에 도서관 다섯 개가 더 생긴다.

세종대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한 그는 전공 공부보다 산을 더

좋아했다. 시골 학교 교장선생님 아들답게 모범생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건 체질에 맞지 않았다. 그는 “자유롭고 싶었고, 의지대로 삶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2006년 중국에서 포르투갈까지 유라시아 자전거 횡단에 나섰다. 8천 킬로미터를 달려간 자전거 여행은 동료들과 뜻이 맞지 않아 파키스탄에서 끝났다. 그는 파키스탄에 혼자 남아 배운 적도 없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분노와 방향을 가라앉혀준 것이 아이들의 천진한 표정이었다.

통장 잔액은 항상 0원... 10년 내 도서관 1천 개가 목표

사진을 찍는데도 나 몰라라 연신 코만 파는 아이, 사진 찍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이, 집 안에 있다가 ‘사진’이라는 말에 뛰어나와 숨을 헐떡이는 아이, 옆에 앉은 동무가 웃으니까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없이 같이 웃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김형욱 씨는 영어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삼청동 미술갤러리에서 여행하면서 찍은
오지 어린이들의 사진전을 열었다.



조영철 기자



김형욱 씨는 여행하며 만난 아이들의 천진한 표정과 해맑은 웃음을 오래 지켜주고 싶다고 했다.

“ 우리나라에서 보낸 책으로
1천 개의 도서관을 만든 다음엔
미국과 유럽으로 나갈 겁니다.
그곳의 마음을 모아 3만 개의
영어책 도서관을 세상 가장자리에
세울 생각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

찍으면서 그는 행복이 뭔지 배워갔다. 파키스탄, 예멘, 인도, 네 팔의 오지를 여행하면서 그의 가슴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멋진 유적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채워가면서 그들의 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백명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99명이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배우고, 자신들보다 나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수입이 20만~30만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 책 한 권 사줄 수 없는 형편이죠. 그때 ‘다음에 올 때는 영어책을 갖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08년 히말라야 메루피크 등반을 갔을 때 현지인 짐꾼에게 또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역시 “자식들이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함께 간 사람들에게 “히말라야에 오르는 우리 꿈을 도와주는 저들의 꿈도 도와주자”고 했다. 2천5백 달러를 모아 인도 뉴델리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가서 충전연색 백과사전 등 좋은 책을 골라 1백50권을 샀다. 1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책을 기차와 버스와 당나귀로 인도의 다스다 마을로 날랐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하나뿐인 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

지난해 봄에는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기증받은 2백 권의 책을 네팔 포카라에 가져갔고, 가을에는 네팔 마셀에 세 번째 도서관을 만들었다. 영어책을 보내는 이유는 영어를 알고 모르는 차이가 그들의 생활을 몇 배로 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요즘 그는 시작이 반 이상임을 실감한다. 조그맣게 시작한 일이 자꾸자꾸 커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에 그는 아는 이들에게 ‘영어책이나 학용품, 문구 등을 보내달라’는 ‘행운의 편지’를 보냈다. 행운의 편지가 들고 돌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백 권의 영어책과 1백 킬로그램이 넘는 장난감이 모였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동양물산에서 1억원여치의 영어책을 후원했다.

1백 킬로그램당 1백만원 정도 드는 운송비도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운송비를 후원해주겠다는 고마운 사람도 만났다. 어떤

이는 ‘현지에 가서 책을 사면 물류비만큼 더 살 수 있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모은 책으로 1천 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책 한 권이 꿈 하나를 만든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주는 티만 내거나 못사는 나라 가난한 아이들이 불쌍해서 책을 보낸다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낸 책이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내가 보낸 책이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올해 그의 목표는 공공도서관에서 영어책을 모으는 사진전을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돌며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후원의 밤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고, 자신이 없어도 영어책을 모으고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도 만들 계획이다. 또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시골 아이들에게 ‘게릴라 전시회’를 열어주기 위해 중고차 한 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지난해 9월 여행 중에 찍은 사진으로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 국제사진공모전에서 인물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그는 서울 삼청동 미음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 판매 수익금은 지난해 12월에 낸 사진 에세이집 <순 끝에 닿은 세상>의 판매 수익금과 함께 도서관 만들기에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책으로 1천 개의 도서관을 만든 다음엔 미국과 유럽으로 나가 그곳의 마음을 모아 3만 개의 영어책 도서관을 세상 가장자리에 세울 생각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홈페이지 이름은 ‘월드지(worldedge)’다. ‘세상(world) 가장자리(edge)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그는 세상 가장자리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세상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김치 소믈리에·막걸리 소믈리에 한국의 맛, 세계에 알린다

프랑스어로 ‘맛보는 사람’을 뜻하는 소믈리에(Sommelier). 흔히 와인 감정사를 뜻하는 말이다. 최근 한식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대표 먹을거리인 김치와 막걸리 소믈리에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음식을 지키고 알리는 김치와 막걸리 소믈리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도전해보자.

김치 소믈리에 표준화·체계화로 세계시장 개척

‘한국의 전통음식’ 하면 가장 먼저 김치를 떠올릴 만큼 김치에 관한 한 너도나도 전문가를 자처한다. 김치는 그만큼 명실상부 ‘국가대표’ 음식이다. 웬만한 가정의 주방마다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치냉장고는 그 애정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다른 음식도 아니고 과연 ‘김치 소믈리에’가 존재할까 의심스러웠지만, 지난해 10월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이 처음으로 김치 소믈리에 과정을 도입했다.

김치 소믈리에에는 김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조리 실력을 갖추고 김치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김치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음식과 잘 어울리는 김치를 추천해주거나 조리법을 전수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김치 소믈리에에는 김치는 물론 한식(韓食)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음식의 맛과 특성, 조리법, 식재료 구입 및 관리법 등을 모두 꿰뚫고 있어야 한다.

김치 소믈리에 교육과정은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이 개설한 8주 수업을 들은 뒤 이론과 조리실습 등 1, 2차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수강료는 1백만원을 웃도는 만만치 않은 액수지만 음식점 업주, 요리사, 김치 판매업자, 식품영양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양향자 이사장은 “김치는 우리 대표 음식이지만 몇몇 장인을 제외하면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최근 수입산 저가 김치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식으로 무장한 김치 소믈리에를 육성해 우리 고유의 김치 맛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전 세계에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치를 비롯한 한식은 각 지역 전통음식의 조리법이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눈이나 손으로 계량돼온 탓에 우리

김치 소믈리에



▲지난해 10월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이 도입한 김치 소믈리에 과정은 김치에 대한 전문지식 등 김치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은 김장 김치를 담그는 김치 전문가 강순의 씨. ◀ 김장 김치의 대표주자인 배추 포기 김치. 한번 담가두면 일 년 내내 온 가족 반찬으로 쓰인다.

고유의 맛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김치 소믈리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국 각 지역의 김치 맛과 특성을 연구해 표준화,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한다.

지난해 11월 김치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오금자(45) 씨는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음식이지만, 정작 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레시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김치 소믈리에 교육을 통해 평소 몰랐던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속재료를 알게 된 것은 물론, 눈대중이 아닌 무게나 용량 단위의 정량화된 조리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식 세계화도 김치 소믈리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양 이사장은 강조한다. 우리 김치를 일본인들이 ‘기무치’라고 주장했던 것도 우리가 음식에 얹힌 역사와 문화에 대해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와인 소믈리에의 존재가 와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처럼 김치 소믈리에도 한식 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소믈리에 막걸리 열풍의 최전선 지킨다

최근의 선풍적인 막걸리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소믈리에라는 말도 새로 등장했다. 술 평론가 허시명 씨가 운영하는 ‘막걸리 학교’는 국내 최초로 막걸리 소믈리에를 양성하고 있다. 막걸리 열풍으로 막걸리 주조법을

가르치는 곳은 늘었지만, 막걸리의 맛과 향을 감별하고 입맛에 맞는 술을 권해주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내 생애 첫 술 빚기’ ‘막걸리 양조장을 찾아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막걸리 학교는 주 1회 2시간씩 10회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 문을 연 이래 얼마 전 수료한 3기까지 막걸리 학교를 거쳐 간 사람은 1백20명. 1기 모집 당시부터 소문을 듣고 온 지원자들로 접수 이틀 만에 마감된 데 이어 2기 모집 때는 접수 시작 10분이 채 되지 않아 수강 인원이 다 찼다.

막걸리 대중화 기여 여부를 자체 판단해 심사를 거쳐 선발한 3기의 경우 수강 인원을 10명 늘려 40명을 뽑기로 했지만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양조장 운영자, 막걸리 주점 운영자, 발효음식을 전공하는 요리 전문가, 레스토랑 요리사, 채소를 길러 먹듯 손수 술을 빚어 마시고픈 애주가에 이르기까지 수강생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심지어 매주 일본에서 날아와 수업을 듣고 가는 열혈 수강생까지 있을 정도다.

지난 3월 서울 명륜동 막걸리 학교에 들어서자 강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김동교(37) 씨는 “와인이 체계적인 등급화와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고급화와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막걸



▲막걸리 학교에서는 국내 최초로 막걸리 소믈리에를 양성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고두밥과 누룩으로 술 빚기에 열중하고 있다. ◀ 그렇게 만든 막걸리를 통해 담으면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보다 더 맛있다.

리도 열풍을 이어나가려면 맛과 품질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히 막걸리 소믈리에가 앞장서서 막걸리의 다양한 맛과 향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막걸리 학교는 진정한 ‘막걸리 소믈리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할 계획이다.

허시명 교장은 “막걸리가 한국 대표 전통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면 막걸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뛰어난 감각을 통해 생산자까지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

글 · 김현상(서울경제신문 기획취재팀 기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 Tel 02-511-1540 wfcc.or.kr
막걸리 학교 Tel 050-5609-5609 huschool.com

땅 욕심 버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초보 농부 '주말농장' 선택은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는 봄. 겨우내 웅크리고 숨어 있던 새싹들이 몸을 활짝 펴는 이 계절, 주말마다 가족들과 작은 텃밭을 가꾸보는 건 어떨까. 초보 도시농부라도 국립농업과학원 박덕병 농업연구사의 '체험 어드바이스' 몇 가지만 새겨두면 올겨울 맛있는 '우리집표' 김치를 맛볼 수 있다.



동아일보

● 7년 전부터 아파트 근처의 작은 텃밭은 내 마음의 청량제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혹시라도 서울에 출장을 갔다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여지없이 텃밭을 둘러본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아프던 머리가 씻은 듯 낫는다.

처음에는 약 15제곱미터 정도의 조그만 텃밭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동네 이웃들과 1백32제곱미터의 텃밭을 함께 가꾸고 있다. 봄이면 상추, 고추, 쪽파, 가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 호박을 심는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배추, 무, 갓, 쪽파를 심는다. 늦가을 김장철이 되면 직접 기른 무와 배추로 이웃들과 김치를 만드는 정겨운 이웃사촌의 정을 느끼기도 한다.

지난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고 멀리 남녘에서 꽃 소식이 들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흙냄새를 온몸으로 맡고 밟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다. 도시민들에게 흙냄새는 그리운 고향의 향기다. 도시 근교에 땅을 빌려 조그마한 주말농장을 가꾸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기르면 깨끗한 내 가족 먹을거리도 수확하고 심신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주말농장을 하다 보면 뻘뻘한 도시 생활 속에서 땅을 일궈 씨앗을 뿌리고 썩이 트고 자라는 자연의 법칙을 보며 소박한 기쁨과 마음의 여유도 느껴볼 수 있다.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주말농장은 농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2, 3월에 분양신청을 받아서 4월 초순부터 농장을 개장한다. 분양 단위는 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한 구획당 16.5~33제곱미터 정도가 일반적이다. 분양가는 농장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3.3제곱미터당 1만~3만원 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임대료가 낮은 편이다.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농협의 주말농장 홈페이지에서 주말농장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외로 조금만 나가면 주말농장 분양안내 광고가 눈에 띈다.

주말농장 초보자라면 집 근처에서 작은 크기로 시작하는 게 좋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원 주말농장에서 유치원생들이 상추 모종심기에 도전하고 있다.

초보자를 위한 4가지 조언

농사 초보자라면 어떤 농장이나 작물, 재배 등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면 농장주의 지도를 받거나 주변 이용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 전에 4가지 숙지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땅 욕심을 버리고 16.5제곱미터(5평) 정도의 작은 면적에서 시작한다. 주말농장은 일이 아니라 취미생활이자 휴식이다. 노동으로 느끼면 자칫 지치고 포기하기 쉬우므로 땅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은 면적이라도 정성껏 가꾸는 자세가 필요하다.

△급수시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그늘막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요긴하기 때문이다. 농장 주변의 화장실, 주차장, 농기구 구비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본다.

△농장은 집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이 좋다. 집과 농장이 너무 멀면 자주 들르지 못해 농장이 엉망이 되기 일쑤. 가까운 곳을 골라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러 가꾸도록 한다.

△농장주의 신뢰도를 점검한다. 농사 초보자라면 농장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장주가 가까이 거주할 경우 언제라도 재배 방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등 이용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어떤 작물을 기르면 좋은가?

주말농장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상추, 고추, 가지, 감자, 고구마, 토마토, 호박, 배추, 열무, 쑥갓, 아욱, 근대, 시금치, 갓, 콩 등이다. 강낭콩, 완두콩, 너룽콩 등은 병충해가 덜해 키우기 쉬운 편. 호박이나 토마토 역시 밀거름만 잘 주면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관리하기가 편하다. 또 수확 기간이 다른 작물보다 길어 주말에 방문할 때마다 먹을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수박이나 참외 등은 숙련된 재배기술을 갖추지 않고서는 키우기가 어려운 작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말농장 상황에 맞는 작물재배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텃밭가꾸기>(2008), <녹색생활농업 실천 매뉴얼>(2009) 등의 책자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길러야 할까?

작물을 기를 때는 씨뿌리기, 모종심기, 김매기, 거름주기, 복지기, 병충해 관리 등이 특히 중요하다. 씨뿌리기의 경우 씨앗

동아일보




주말농장의 백미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작물을 가꾸면서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부산 농협이 마련한 부산 기장군 철마면 근처 주말농장.

을 직접 뿌리는 작물은 씨앗을 뿌린 다음 물을 주지 말고, 모종 심기를 한 작물은 모종을 심은 뒤 충분한 물을 줘야 한다. 씨뿌리기 후 물을 주면 땅이 굳어져 싹이 나오기 힘들다.

또한 돌아나는 잡초를 잘 골라서 김을 매주는 것은 농사 성공의 관건이다. 거름을 자주 주는 것보다 어린 잡초부터 김을 잘 매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 달에 2번 이상 농장에 들러 물주기와 풀뽑기를 해주는 게 좋다.

거름은 작물에 따라 주는 방법이 다르다. 농장주나 주변 이용자와 잘 상의해 거름을 주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작물을 심기 전에 비료를 줘야 하는데, 넘치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주말농장은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므로 병충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농약 대신 목초액, 식초, 소주, 우유, 설탕, 담배꽂초 등을 우려낸 물을 이용해 병충해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 · 박덕병(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주말농장 조언받을 수 있는 곳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02-459-8992 agro.seoul.go.kr

▷ 텃밭농원에 참여하는 방법과 서울 시내에 위치한

25개 우수 농원의 특징을 소개한다.

농협 주말농장 02-2224-8102 weeknfarm.co.kr

▷ 전국 지역별 주말농장 정보와 가꾸기 쉬운 작물,

재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032-201-4549 cafe.naver.com/dosinongup

▷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농사의 기본부터

도시텃밭 만들기 등을 가르친다.

대원 주말농장 011-497-4187 daewonfarm.co.kr

▷ 우리나라 최초 주말농장. 서울 서초구 청계산 아래에 있으며

전문 농업인인 농장주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

알고 가면 더 즐거운 '등산'

산림청 운영 '맞춤형 등산학교' 모집... 백두대간 생태탐험 등 인기

● 등산이 '국민 레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산림청은 본격적인 등산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늦가을인 11월까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운영한다. 등산학교는 청소년, 일반인,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등 18개 과정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각 과정별로 난이도와 교육시간, 참여예상 인원 수 등을 고려해 교육 횟수를 세분화한다.

교육은 전문산악인으로 구성된 강사들과 직접 산을 타고 숲

식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독도(讀圖)법이나 생존법,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을 통해 배운다. 현장엔 나무와 풀, 곤충들에 관한 재미있는 과학상식과 숲의 소중함 등을 이야기해 주는 숲 해설가가 배치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야영하며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것도 장점.

과정별 교육 인원은 모두 2천7백50명. 청소년과정 1천1백75명, 일반과정 9백35명, 장애인 1백20명, 산악구조대 40명, 등산문화 40명,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3백명 등이다. 특히 청소년과정의 교육 인원은 지난해보다 30퍼센트 확대해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등산학교에 참여하도록 했다.

5박6일의 가장 긴 일정을 소화하는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은 한국산악회와 산림청이 10년째 추진해온 프로그램. 올해는 2001년도 제1회에 참여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산림생태계를 체험하고 올바른 등산문화를 접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주한 외국대사관이나 외국상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국제학교 등산문화 체험과정도 신설해 운영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엔 비용 전액 무료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이상인 사무관은 "등산학교는 산림청이 2003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데,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 등산학교는 안전하고 올바른 등산요령과 등산예절을 교육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설악산, 지리산 같은 유명 산 외에도 아름다운 산이 많다는 것을 소개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 비용은 하루에 1만원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의 교육과정은 무료다. 한국등산지원센터 이창흠 팀장은 "처음엔 전 과정이 무료로 운영됐으나 신청만 한 후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난감했다. 그래서 참가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아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산학교 참가 신청은 한국등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G]

글 · 김광숙 객원기자

지난해 7월 말 산림청 등산학교의 청소년 여름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원 정선군 함백산을 오른 뒤 하산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Tel 042-481-4106
한국등산지원센터 Tel 02-906-2844 www.kmsc.kr



사진작가 배병우가 추천한 <신화의 힘>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란?



● 반평생 동안 소나무 사진을 찍어온 배병우 교수(서울 예술대학 사진학과)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다. 2005년 펴낸 <청산에 살았었다>는 사진집으로는 드물게 3판까지 찍어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 사진집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렌즈 속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산등성이 너머의 바다는 한결같이 아름답다. 침묵 속에서 태연히 자연의 숭고함을 내뿜는다. 그러나 그는 안다. 세월이 자연을 조금씩 변하게 만든다는 것을. 변해가는 자연이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겨울 하얀 눈으로 뒤덮인 오대산으로 향할 때 그는 책 한 권을 가방에 넣었다. 평소 사진 작업을 위한 여행을 떠날 때면 카메라만큼이나 책을 필수품으로 챙기는 그에게 후배가 추천한 <신화의 힘>이었다.



배병우 교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과 자연이 지혜롭게 조화될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신화는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와 자연에 대한 옛 선인들의 인식과 이해가 담겨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온 삶의 방식, 진리, 고민 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 교수가 추천한 <신화의 힘>은 비교신화학자 조지프 캠벨과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가 신화에 대해 나눈 대담을 정리한 책이다. 그리스 신화뿐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언 신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신화에 빚대어 설명해 준다.

그는 오대산에서 2박3일 동안 꼬박 이 책을 읽으며 인상적인 부분을 수첩에 적어놓았다. 급히 흘러 쓴 듯했지만, 문장마다 찍힌 깨끗한 마침표 속에서 왜 그가 이 책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인간의 삶이 결국 ‘무엇’에 느낌표를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쾌한 답변도 끌어낼 수 있었다.

“1852년 인디언 추장이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어떻게 사고파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일부요, 이 땅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문명화된 삶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자연의 이치죠. 신화 역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지혜롭게 조화될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신화 빚대어 인간의 모든 문제 설명해줘

배 교수는 작업실 창밖의 작은 산을 바라봤다. 피사체로 인연이 된 소나무는 이제 눈으로 훑어만 봐도 그 상태를 훤히 꿰뚫는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면서 숲의 50퍼센트를 차지하던 소나무가 이제 불과 1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숲은 변했다”며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선 헛헛함이 묻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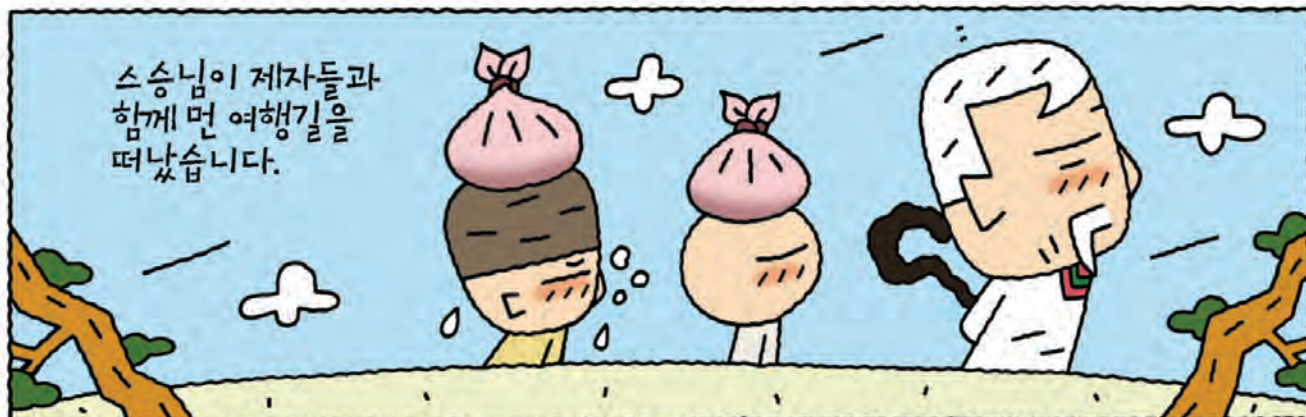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요즘 전신하고 있는 인천 용진군 굴업도 사진들을 보여줬다. “개발로 인해 어쩌면 골프연습장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서로 필요한 만큼만 나눠 쓰며 다툼 없이 산다는 것,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공간 속에서 우리나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G

글·김민지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마음의 깊이

글과 그림·최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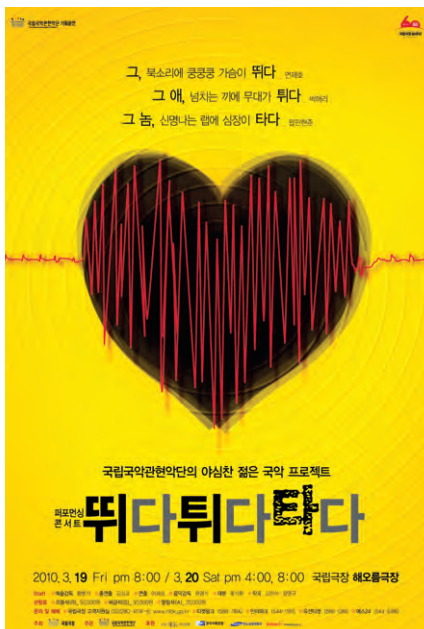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 존 밀러(미국 저술가)

‘젊은 국악’을 보여줄게

신개념 국악 콘서트 <뛰다 튀다 타다>

일시 4월 17일 오후 4시,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으뜸석 5만원, 버금석 3만원, 달림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 국악 공연의 예술적 요소를 현대적 무대기술과 융합한 퍼포먼싱 콘서트 <뛰다 튀다 타다>가 4월 17일 국립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젊은이들의 사랑과 고뇌를 그린 이 공연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해 마련한 새로운 개념의 음악회다.

먼저 국악에 멀티스크린 영상, 무용 퍼포먼스까지 넣어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버무린 점이 이색적이다. 다양한 무대장치들을 이용한 생동감 넘치는 연주 형태도 돋보인다. 대형 화면으로 실 새 없이 흘러가는 영상도 놓쳐선 안 될 볼거리.

<뛰다 튀다 타다>는 지난해 초연

당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타악 단원인 연제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연주와 연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설정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는 삼각관계라는 새로운 갈등 구도를 엮어낼 주인공 ‘그놈’役に 세계적인 춤과 랩 실력을 갖춘 한류스타 팝핀현준이 발탁됐다. 이미 한국의 구전소리를 소재로 한 랩 앨범과 명창 김영임과의 협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재해석을 시도한 팝핀현준은 이번에 국악 관현악에 맞춰 랩은 물론 화끈한 춤 실력도 보여줄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섞인 이번 공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작업 노하우를 가진 국내 최고 스태프들도 함께한다. 국악의 새로움과 다양성을 선보여온 작곡가 김만석, <반칙왕> <달콤한 인생> 등의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 장영규, 제13회 한국 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수상자인 무대디자이너 박성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꾸준히 호흡을 맞춘 연출가 이재성 등이 그들.

황병기 예술감독은 “지난해 첫 공연이 젊은이들의 왕성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 음악의 젊은 감각을 끌어내는 것만으로 성공을 거뒀다면 올해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주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G** 글·김지영 기자



‘요요마 & 실크로드 앙상블’ 초청 공연

일시 4월 18일 오후 5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6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6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02-580-1300 www.sac.or.kr

예술의전당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초청해 여는 ‘월드스타 시리즈’의 첫번째 공연. 첼리스트 요요마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콘서트에서는 8개국의 민속 음악가로 구성된 ‘실크로드 앙상블’이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주를 선보인다. 지금까지 5장의 앨범을 낸 실크로드 앙상블은 아시아, 유럽, 북미 전역의 공연에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진전 ‘그 따뜻한 이별의 기억’

일시 4월 26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화요일 휴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II
관람료 무료
문의 02-3704-3114 www.nfm.go.kr

국립민속박물관은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충남 상례 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태안을 기반으로 삶을 꾸려온 김연석 선생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상례 사진을 모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1960년대의 상례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 형태로 남아 있는 이 사진들은 당시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던 장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깨끗한 강에서 살고 싶어요”

한강을 청소하자 황복이 돌아왔습니다.

영산강의 은어도, 낙동강의 큰가시고기도

맑고 깨끗한 집이 필요합니다.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입니다.

강을 깨끗이 청소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글로벌 기업정상회의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Global Summit 2010

2010. 4. 21(수) ~ 23(금)
대한민국 서울 COEX

글로벌 녹색경제로 가는 길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
기업계의 녹색경제 활동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리처드 브랜슨 경
버진(Virgin) 그룹 회장



제임스 카메론
아카데미상 수상자
영화감독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



모하메드 나쉬드
몰디브 대통령



이만의
대한민국 환경부장관

www.b4esummit.com

주관



global initiatives



환경부